

장애영향평가 지침 마련 연구

이혜경 · 이수연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ment Institute

본 보고서의 연구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으로 (재)한국장애인개발원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연구진

연구책임 : 이해경(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 연구개발팀장)
 공동연구원 : 이수연(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 연구개발팀 연구원)

자문위원

김경희(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별영향평가센터장)
 김동기(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동호(장애주류화정책포럼 대표)
 조태홍(한국 DPI 기획실장)

발간사

우리나라는 2008년 ‘UN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을 비준하고, 2013년부터는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 계획’의 주도국으로서 인천전략을 모범적으로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의 국제협약과 계획은 장애인의 권리를 실현·증진시키고 보호한다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법은 아니지만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고 있어, 장애관련 정책이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이미 제정된 법률이나 추진되고 있는 정책, 사업에 있어서도 장애인권리협약이나 인천전략에서 제시하는 목표나 이념을 포함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여러 영역에서 장애인은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어, 장애인에게 발생하는 불평등성을 확인하고 문제를 확인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즉 장애인지제도에 대한 도입과 실행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원에서는 장애포괄적 또는 장애인지적 관점의 정책과 제도 실행을 위해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오고 있으며, 장애계에서도 10여년 전부터 장애인지제도의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음에도 아직은 관련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원에서는 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장애인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권리보장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장애인지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장애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기초 연구의 후속으로 이번 장애영향평가 지침 마련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장애인지제도의 도입과 실행, 또는 장애포괄적 혹은 장애인지적 관점의 정책과 제도의 실행을 위해서 아직은 나아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이나 우리 원에서는 장애계와 함께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자문위원으로 참여해주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김경희 센터장님, 장애주류화정책포럼 김동호 대표님, 목원대학교의 김동기 교수님, 그리고 한국장애인연맹의 조태홍 기획실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연구를 포함하여 우리 원에서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장애인지제도, 장애영향평가 관련 연구가 우리 사회에 장애인지제도 도입에 따른 장애영향평가 실행 시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9년 10월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
최 경 속

➤ 목 차

연구요약	ix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1
2. 연구내용 및 방법	3
3. 연구수행체계	4
 II. 유사 영향평가 이해	 6
1. 고용영향평가	6
1) 법적근거	6
2) 실행방법	7
3) 추진체계	8
4) 평가를 위한 지침	9
2. 경쟁영향평가	10
1) 법적근거	10
2) 실행방법	11
3) 추진체계	13
4) 평가를 위한 지침	14
3. 성별영향평가	15
1) 법적근거	15
2) 실행방법	15
3) 추진체계	18
4) 평가를 위한 지침	25



4. 아일랜드의 장애영향평가	26
1) 장애 관련 정책 추진 현황	26
2) 장애영향평가 실행 방법	27
5. 소결	31
Ⅲ. 장애영향평가 지침을 위한 의견조사	33
1. 조사개요	33
1) 조사대상	33
2) 조사내용	34
3) 분석방법	37
2. 델파이조사 결과	37
1) 1차 델파이조사 결과	37
2) 2차 델파이조사 결과	44
3.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51
1) 지침 구성의 적절성	51
2) 지침 내용의 적절성	51
3) 사용 용어의 적절성	51
4) 지침 활용도 제고를 위한 의견	52
5) 기타 의견	53
4. 소결	54
Ⅳ. 장애영향평가 이행을 위한 지침	56
1. 장애영향평가 지침 구성	56
2. 제도 이해	56
1) 장애영향평가 추진배경	57
2) 장애영향평가 관련 개념	58
3. 장애영향평가 구성 요인	59
1) 장애영향평가의 개념	59
2) 장애영향평가의 운영체계	60
4. 장애영향평가 실행	62

1) 법령에 대한 평가 체크리스트	62
2) 계획에 대한 평가 체크리스트	63
3) 장애영향평가 관련 서식	64
4) 장애영향평가 결과보고	73
5. 장애영향평가 지원체계	73
1) 장애영향평가 전문기관	74
2) 장애영향평가 교육	74
6. 참고자료	76
1) 관련 법령 목록	76
2) 법령에 따른 3년 이상 중장기계획 목록	80
3) 유사영향평가	81
V. 결론 및 제언	84
1. 연구결과 논의	84
2. 정책 제언	85
참고문헌	87
[부록 1] 고용영향평가 지침서 구성	88
[부록 2] 경쟁영향평가 지침서 구성	89
[부록 3] 성별영향평가 지침서 구성	91
[부록 4] Ireland 정의평등부의 장애영향평가 기록지(양식)	94
[부록 5] 장애영향평가 지침 구성을 위한 전문가 델파이조사지(1차)	96
[부록 6] 장애영향평가 지침 구성을 위한 전문가 델파이조사지(2차)	102



표목차

〈표 II-1〉 고용영향평가 내용	8
〈표 II-2〉 고용영향평가 지침 내용	9
〈표 II-3〉 경쟁영향평가 지침 내용	14
〈표 II-4〉 성별영향평가 기관	16
〈표 II-5〉 성별영향평가 지표(사업)	17
〈표 II-6〉 성별영향평가 운영체계	19
〈표 II-7〉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대상인 경우의 추진체계(법령 및 계획)	20
〈표 II-8〉 추진체계(사업)	21
〈표 II-9〉 중앙행정기관	23
〈표 II-10〉 지방자치단체	24
〈표 II-11〉 성별영향평가 지침 내용	25
〈표 III-1〉 델파이 조사 참여자	33
〈표 III-2〉 전문가 의견조사 참여자	34
〈표 III-3〉 1차 델파이 조사 항목	35
〈표 III-4〉 1차 델파이 조사지 구성 예시(세부내용 부록 5 제시)	36
〈표 III-5〉 2차 델파이 조사지 구성 예시(세부내용 부록 6 제시)	36
〈표 III-6〉 지침 전체 구성에 대한 의견(1차)	38
〈표 III-7〉 장애인지제도 소개에 대한 의견(1차)	39
〈표 III-8〉 장애영향평가 구성요인에 대한 의견(1차)	40
〈표 III-9〉 장애영향평가 실행에 대한 의견(1차)	41
〈표 III-10〉 장애영향평가 지원체계에 대한 의견(1차)	43
〈표 III-11〉 장애영향평가 참고자료에 대한 의견(1차)	44
〈표 III-12〉 지침 전체 구성에 대한 의견(2차)	45

〈표 Ⅲ-13〉 장애인지제도 소개에 대한 의견(2차)	46
〈표 Ⅲ-14〉 장애영향평가 구성요인에 대한 의견(2차)	47
〈표 Ⅲ-15〉 장애영향평가 실행에 대한 의견(2차)	48
〈표 Ⅲ-16〉 장애영향평가 지원체계에 대한 의견(2차)	49
〈표 Ⅲ-17〉 장애영향평가 참고자료에 대한 의견(2차)	50
〈표 Ⅲ-18〉 추가 영역	55
〈표 IV-1〉 장애영향평가 체크리스트(법령)	62
〈표 IV-2〉 장애영향평가 체크리스트(계획)	63
〈표 IV-3〉 분석평가 지표(법령)	64
〈표 IV-4〉 분석평가 지표 예시(법령)	66
〈표 IV-5〉 분석평가 지표(계획)	67
〈표 IV-6〉 분석평가 지표(사업)	69
〈표 IV-7〉 장애영향평가 대상 법령 목록(안)	76
〈표 IV-8〉 법령에 따른 3년 이상 중장기 계획 목록(안)	81



ㄴ 그림목차

[그림 I -1] 연구수행체계	5
[그림 II -1] 고용영향평가 추진체계	9
[그림 II -2] 입법 과정에서 경쟁영향평가 제도 실행 방법	13

연구요약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 장애주류화 또는 장애인지적 관점의 정책과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관련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오고 있으며 관련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한 요구도 제기되고 있으나 사실 이러한 법과 제도가 언제 실현될지 모른다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부터 장애인지적 관점에서의 제도와 정책 실현을 위해 본원에서는 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법 제정이 되어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연구만 앞서나가고 있다는 의견이 있기도 함. 그러나 다른 유사사례들을 참고하였을 때, 법 시행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사례를 축적하는 것이 후에 시행될 제도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안정화되어 추진될 수 있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 장애영향평가는 장애인지제도 실행의 강력한 수단이자 도구로, 정책이나 법령,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에 장애가 되는 것을 확인하는데 사용되는 과정이며, 장애인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 종합적인 검토라고 할 수 있음. 또한 Ireland Department of Justice and Equality에서는 장애영향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이혜경 외, 2018).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의 내용을 반영하여 장애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준비를 함에 있어 국내외 사례들을 수집·분석하여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추후 장애영향평가를 직접 담당하게 될 공무원과 관계자들의 이해 및 인식 제고를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장애영향평가 지침의 기본 내용을 마련하고자 함.



2. 연구내용 및 방법

- 첫째, 선행연구 및 국내외 유사영향평가제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함. 성별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의 현황과 각 평가의 지침 또는 매뉴얼내용을 분석하여 장애영향평가 지침에 함의를 도출함. 또한 아일랜드 정의평등부의 장애영향평가 지침을 분석하여 국내 함의를 도출함.
- 둘째, 장애영향평가 지침 내용 구성을 위해 델파이조사를 실시함. 델파이조사는 유사 영향평가제도 전문가 및 장애계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장애영향평가 지침 구성 내용의 적절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의견을 조사함.
- 셋째, 장애영향평가 지침 구성의 타당도, 이해도, 적용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무원대상의 의견조사를 실시함. 유사 영향평가제도 전문가 및 장애계를 대상으로 실시한 델파이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장애영향평가 지침 구성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용어사용의 적절성, 이해도 및 적용가능성에 대하여 조사함.
- 넷째, 관련 선행연구 및 자료 분석결과, 전문가, 장애계, 공무원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장애영향평가 지침안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

II. 유사 영향평가 이해

- 본 장에서는 유사 영향평가제도의 평가의 법적근거, 실행방법과 추진체계, 그리고 평가실행을 위한 지침 내용에 대하여 정리하였음.
- 고용영향평가는 고용정책기본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2010년 시범평가를 거쳐 2011년 이후 본격적인 평가를 시행하게 되었으며, 한국노동연구원을 고용영향평가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평가를 시행하고 있음. 즉, 고용영향평가에 따른 부처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공무원이 직접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아닌 전문기관을 통해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산업별 고용에 따른 효과, 근로조건 개선을 통한 고용 효과 등과 같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구보고서의 형태로 제시하고 있음. 평가 이후 해당 부처에서는 이

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검토 및 평가결과를 안내하는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한국노동연구원에서 평가 가이드라인을 매년 발간하고 이를 활용하여 평가를 실시함. 동 가이드라인 내용을 보면, 크게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개요, 평가 산출식, 산출 예시(사례)로 구성되어 있음. 개요 부분에서는 평가 대상사업 및 적용 제외사업, 평가 내용, 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활용, 세부 추진일정의 네 가지 내용이 제시되어 있음. 고용영향평가 산출식에는 고용효과 산출 방식이 사업별로 제시되어 있으며, 산출예시 영역에서는 양식, 산출 예시, 평가 담당자 연락처가 제시되어 있음.

- 경쟁영향평가는 정부 각 부처의 신설·강화 규제가 시장에서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전에 분석·평가하여 경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자유로운 기업활동과 소비자의 편익을 증가시키는 대안을 모색하는 제도임. 경쟁영향평가 역시 OECD의 권고에 따라 도입·실행되었으며, 공정거래법에 근거를 두고 있음. 고용영향평가와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부처(서)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닌 전문기관을 통해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OECD 툴킷에 근거한 매뉴얼을 발간·배포하고 있음. 동 매뉴얼은 서론에서는 경쟁영향평가의 유형과 절차가, 핵심개념에서는 평가관련 주요 개념들이 제시되어 있음. 평가실시는 예비평가, 심층평가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대안에서는 평가를 통한 대안의 제시, 정성적·정량적 분석과 편익·비용 측정을 포함하는 대안의 비교,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고 제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권고안을 설명하고 있음. 평가운영과 기관간 역할분담에는 평가대상, 예비평가, 심층평가, 평가절차 및 기관간 역할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부록(참고)에서는 실제 사례와 법령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성별영향평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법령, 계획, 사업 추진담당 부처(서)에서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며, 특성성별영향평가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전담 기관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음. 또한 매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을 발간하며 평가담당자 대상 교육 및 상담을 제공하고 있음. 동 지침에 따르면, 제도의 개요에는 평가제도 개요, 평가 운영체계, 실적관리 및 분석보고, 주요일정, 주요 개정사항이 제시되어 있음. 두 번째 법령·계획·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각 평가별 개요, 평가대상, 평가절차, 단계별 세부작성 요령, 기관별 종합결과 보고가 제



시되어 있음.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에는 개요, 정책개선 권고 및 이행점검, 평가절차가 제시되어 있음. 평가 운영 및 지원체계에는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의 역할, 평가시스템, 교육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대해서, 마지막 참고자료에는 관련 법령, 지난 평가 주요 개선사례, 부처별 성평등 실행목표, 주요 통계 DB사이트 등이 제시되어 있음.

- 한편 아일랜드는 정의평등부(Department of Justice and Equality)에서 장애영향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단계별 프로세스를 설명하고 있는 정부 지침을 마련하여 정부 부처 공무원들에게 안내하고 있음. 장애영향평가 단계는 다음과 같음.
 - 1단계 : 제안된 결정이 장애인에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예 혹은 아니오?
 - 2단계 : 잠재적 영향에 대한 초기 평가 기반의 증거 개요 설명
 - 3단계 : 만약 그 결정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 개략적으로 설명
 - 4단계 : 장애인에 대한 잠재적 영향이 부정적이라면, 그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려는 방법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
 - 5단계 : 시간 경과에 따른 장애인의 영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취해지는 모든 조치를 개략적으로 설명
- 이러한 유사영향평가제도의 상황과 선행연구들을 고려해볼 때, 장애영향평가는 법령 및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각 부처(서)의 공무원이 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전담기관에서 검토하도록 하는 절차로 진행되는 것이 적절할 것임. 또한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사례처럼, 각 부처(서)에서 제출된 장애영향평가 결과 중 장애차별해소를 위해 개선이 시급한 정책이나 계획이나 사업에 대해서는 전담기관에 특정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로 추진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유사 영향평가의 사례를 통해 장애영향평가 지침은 서론에 해당하는 영향평가의 이해와 장애영향평가 실시(법령, 계획), 장애영향평가 운영 및 지원체계, 기타 참고자료 등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자 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 부처(서)의 공무원이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참고·활용할 수 있는 지침안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영향평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업무에 적용가능할 수 있는 자료를 제안하고자 하는 것임.

Ⅲ. 장애영향평가 지침을 위한 의견조사

- 본 연구에서는 장애영향평가 지침(안) 마련을 위하여 델파이조사 및 공무원 의견조사를 수행하였음.
- 델파이조사에서는 지침 초안 마련을 위하여 장애계 및 유사영향평가 전문가 10인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서면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음.
 - 그 결과, 영향평가 지침서 영역(장애인지도 소개, 구성요인, 실행, 지원체계, 참고자료 등)별 세부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침서에 들어가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언급하였음. 또한 기본적으로 제시된 세부 영역 외에 추가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영역(〈요약 1〉)에 대해서도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침서에 수록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 1〉 추가 영역

장애영향평가 대분류	추가 내용
장애인지도 소개	장애인참여, 제도 도입후 변화
장애영향평가 구성요인	장애영향평가 절차, 장애영향평가 대상, 장애영향평가 적용, 장애감수성 여부, CRPD 기본원칙 달성여부
장애영향평가 실행	정책제도 개선 이행 점검, 사업에 대한 평가 실시, 모니터링
장애영향평가 지원체계	영향평가 계획 수립, 장애영향평가 매뉴얼 보급, 민관협력체계 구축
참고자료 등	모니터링, 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협약 자료, 장애인정책 종합 계획과의 연계성, 장애영향평가 주요 개선사례

- 다음으로는 델파이 조사를 통해 완성된 지침구성안을 가지고 향후 장애영향평가가 도입되어 실행될 경우, 직접 담당할 공무원을 대상으로 장애영향평가 지침안에 대한 구성 및 내용 적절성, 사용 용어의 적절성, 지침 활용도 제고를 위한 의견, 기타의견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음.
 - 본 조사에 총 5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였고 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장애영향



평가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편이어서 관련 의견을 제시하는데 어려움을 토로하였으며, 좀 더 이해가 쉬운 용어나 단어를 활용하여 재수정될 필요가 있었고 또한 이에 대한 관계자들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또한 이 지침서의 효과성을 위해 강제성을 댈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필요하며, 장애 인식개선이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음.

- 델파이조사와 공무원 의견조사를 종합해볼 때, 장애영향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나 운영체계 등에 대한 내용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나, 현 시점에서 이러한 내용을 제시하는 것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 아쉬움이 남음. 또한 장애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용어에 대한 어려움 등으로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IV. 장애영향평가 이행을 위한 지침

- 장애영향평가 지침은 크게 5가지 영역으로 구성하였음.
 - 유사 영향평가 지침의 사례와 델파이조사를 통한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제도의 소개(이해), 장애영향평가 이해, 장애영향평가 실행, 장애영향평가 지원체계, 참고자료로 구성하였음.
- 제도의 소개(이해) 영역은 장애영향평가의 추진배경과 더불어 장애인지예산, 장애분리통계 등 장애인지적 관점에서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장애영향평가 이해 영역은 장애영향평가에 대한 개념과 추진체계에 대하여 다루고 있음.
- 장애영향평가 실행 영역은 법령과 계획, 사업에서 실제 장애영향평가를 수행할 때 사용되는 양식과 작성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장애영향평가 지원체계 영역은 장애영향평가 주체, 장애영향평가 지원 및 교육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참고자료에는 주요 법령 목록, 법령에 따른 3년 이상의 중장기계획 목록, 유사영향평가 제도 소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본문 참조 바람.

V. 결론 및 제언

1. 연구결과와 논의

- 본 연구는 장애인지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장애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기초 연구의 후속 연구로, 장애인지제도 실행의 강력한 수단이자 도구인 장애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준비를 함에 있어 국내외 사례들을 수집·분석하여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추후 장애영향평가를 직접 담당하게 될 공무원과 관계자들의 이해 및 인식 제고를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장애영향평가 지침의 기본 내용을 제시하는데 주요한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 국내 유사 영향제도의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고용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의 현황과 각 평가의 지침 또는 매뉴얼 내용을 분석·정리하였으며, 해외사례로 아일랜드의 장애영향평가 지침을 발췌·요약하였음. 또한 장애영향평가 지침 내용 구성을 위해 장애계 및 유사영향평가 제도 전문가를 대상으로 2회에 걸쳐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여 구성과 내용의 적절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조사하였음. 그리고 추후 장애영향평가를 직접 담당하게 될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침의 구성과 이해도, 적용가능성 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음. 선행연구와 유사영향평가 사례, 델파이조사, 의견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장애영향평가 지침안을 제시하였음.
- 그 결과, 장애영향평가 지침은 크게 5개 영역으로 제도 소개(서론), 장애영향평가 구성요인, 장애영향평가 실행, 장애영향평가 지원체계, 장애영향평가 참고자료로 구분될 수 있었음.
- 선행연구와 장애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장애영향평가 지침 구성 초안을 제시하였음에도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우선 아직 장애영향평가가 법적 근거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유사영향평가 지침에서처럼 우수사례를 함께 제시하지 못하였음. 그러나 현행 법령과 추진되고 있는 종합계획, 사업을 대상으로 장애영향평가 분석 틀을 적용하는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이해도를 높이하고자 하였음. 두 번째 지침에 제시되어 있는 장애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주요 법령 목록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정책으로 장애인이 당연히 정책 대상에 포함되는 법을 연구진에서



제시한 것으로 추후 실제 적용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임.

-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장애영향평가 지침 연구를 수행한 것은 지속적으로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축적함으로써 장애영향평가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실행되게 되었을 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며,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학습함으로써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임.

2. 정책 제언

- 장애영향평가 지침 마련 연구를 통해 향후 장애영향평가 담당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장애영향평가가 도입 시 활용될 수 있는 지침 초안 내용을 제시하면서 장애영향평가가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한 정책 과제를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함.
- 첫째, 장애영향평가 실행을 위한 근거 마련, 즉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함.
 - 장애영향평가는 정책이나 법령,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에 장애가 되는 것을 확인하는데 사용하는 과정이며, 장애인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 종합적인 검토라고 할 수 있음. 장애영향평가를 통해 법령이나 계획, 사업들이 장애인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충분히 인식하고 이해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이므로, 장애영향평가가 실행되어야 함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을 것임. 결국은 장애인이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고 차별없는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져야 하기에 이를 실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함. 장애영향평가는 법령 제정 단계, 즉 초기단계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법에 따른 계획이 수립 가능하고, 계획에 따른 예산 반영이 뒷받침될 수 있기에 장애영향평가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목소리를 내야할 것임. 이와 더불어 장애영향평가 주무부처와 전담과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장애영향평가를 담당하게 될 공무원 및 관련자에 대한 지속적 교육이 필요함.
 -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가 시행될 때,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제도가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시범사업을 추진하거나, 법의 개정으로 인해 바뀌어야 하는 업무체계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적인 지침이나 구체적인

교육이 없으면 잘 실행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임. 이에 장애영향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실행된다 할지라도 담당자의 이해가 없다면, 제대로 실행될 수 없기에 지속적으로 관련된 개념과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에 장애영향평가 내지는 장애주류화 정책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국가기관이 관련 내용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마지막으로 장애영향평가를 수행할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하도록 해야 함.
 - 장애영향평가나 장애인지예산제도, 장애분리통계 구축은 장애주류화를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이라고 할 수 있으며, 법적 근거 없이도 지속적으로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지속적으로 자료들을 축적해나가고 있는 상황임. 유사 영향평가제도의 사례에서도 확인하였듯이, 장애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제도의 도입과 실행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고, 또 연구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유관기관 및 장애계, 공무원의 역량을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선행연구에서는 전문기관을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제안한 바 있음. 이러한 지원체계나 조직이 없이는 장애영향평가가 효율적·효과적으로 수행되기는 어려울 것이 자명하므로 조기에 이러한 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함.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우리나라가 장애에 대한 정책을 입법화 하여 추진해 온 지 벌써 40년이 지나고 있다. 장애에 대한 최초의 별도 법인 「장애인특수교육법」이 1977년에 제정되었고, 이후 현재까지 20여개에 이르는 장애 관련 법이 제정되어 실행되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서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소득, 고용, 교육, 건강, 문화활동 등 여러 분야에서 참여율이 낮고 불리한 조건(또는 환경)에 처해있어 우리나라의 다양한 장애인 정책 및 제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불평등은 끊임없이 지속되어 오고 있다.

구체적 통계를 살펴보면, 장애인의 고용율은 36.5%로 전체 인구의 고용율인 61.3%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인구의 58.5%가 중졸이하의 학력을 가진 반면, 비장애인의 경우 25.4%가 중졸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등 고용, 교육에서 확인한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장애인에게 발생하는 불평등성을 확인하고, 문제를 확인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바로 장애인지제도에 대한 도입이며, 장애주류화 또는 장애인지적 관점에서의 정책이나 제도의 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장애인의 욕구가 보다 구체적이며 다양화됨에 따라 장애 관련 법과 정책들이 특수하게 특화되어 오고 있으나 새롭게 개발되는 정책 분야에서는 장애요소를 인지하지 못한 채 개발이 되어 어느 시점에서 장애인의 요구와 부정합이 나타나 정책을 수정하는 과정이 나타나고(김동호, 2019) 있기도 하다.

장애주류화 또는 장애인지적 관점의 정책과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관련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오고 있으며 관련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한 요구도 제기되고 있으나 사실 이러한 법과 제도가 언제 실현될지 모른다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부터 장애인지적 관점에서의 제도와 정책 실현을 위해 본원에서는 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법 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연구만 앞서나가고 있다는 의견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다른 유사사례들을 참고하였을 때, 법 시행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사례를



축적하는 것이 후에 시행될 제도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안정화되어 추진될 수 있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017년 ‘장애인지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에서는 장애인지제도의 지향점을 사회통합에 두고, 장애특정적 정책과 장애 포괄적 정책이 투트랙(2-track)으로 함께 추진되고, 장애인 인권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장애인지제도 도입과 실행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제안하였다. 2018년 ‘장애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기초 연구’에서는 장애인지제도 도입 및 실행에 대한 필요성과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장애주류화 및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장애인 관련 법령, 계획, 사업에 대한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활용될 수 있는 분석 틀을 제안하였다.

장애영향평가는 장애인지제도 실행의 강력한 수단이자 도구로, 정책이나 법령,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에 장애가 되는 것을 확인하는데 사용되는 과정이며, 장애인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 종합적인 검토라고 할 수 있다. 또한 Ireland Department of Justice and Equality에서는 장애영향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이혜경 외, 2018).

사실 장애영향평가, 장애인지제도 등에 대하여 오랫동안 연구를 수행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이에 장애계에서는 장애영향평가만을 고집하기 보다는 우리 사회에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이들에 대한 영향평가를 통합하여 인권영향평가와 같은 명칭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의견도 제시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영향평가를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장애인지적 관점의 정책과 제도의 필요성과 시급함 때문이며 장애인에게 발행하는 불평등성을 확인하고 해결해 나가기 위한 전국가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의 내용을 반영하여 장애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준비를 함에 있어 국내외 사례들을 수집·분석하여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추후 장애영향평가를 직접 담당하게 될 공무원과 관계자들의 이해 및 인식 제고를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장애영향평가 지침의 기본 내용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장애영향평가는 장애인지제도의 중요한 수단이자 실행도구이나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유사 영향평가 제도들을 살펴보고, 국외의 사례들을 참고하여 장애영향평가 지침을 제안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첫째, 선행연구 및 국내외 유사영향평가제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의 현황과 각 평가의 지침 또는 매뉴얼내용을 분석하여 장애영향평가 지침에 함의를 도출한다. 또한 아일랜드의 장애영향평가 지침을 분석하여 국내 함의를 도출한다.

둘째, 장애영향평가 지침 내용 구성을 위해 델파이조사를 실시한다. 델파이조사는 유사 영향평가제도 전문가 및 장애계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장애영향평가 지침 구성 내용의 적절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의견을 조사한다.

셋째, 장애영향평가 지침 구성의 타당도, 이해도, 적용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무원대상의 의견조사를 실시한다. 유사 영향평가제도 전문가 및 장애계를 대상으로 실시한 델파이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장애영향평가 지침 구성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용어사용의 적절성, 이해도 및 적용가능성에 대하여 조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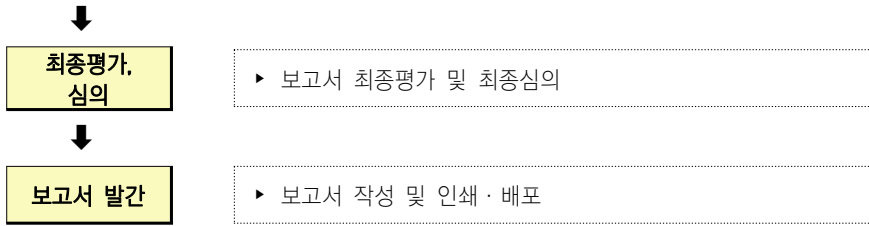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관련 선행연구 및 자료 분석결과, 전문가, 장애계, 공무원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장애영향평가 지침안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3. 연구수행체계

본 연구의 목적인 장애영향평가 실행을 위해 필요한 지침을 개발하고, 실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수행체계는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1-1] 연구수행체계



Ⅱ 유사 영향평가 이해

1. 고용영향평가¹⁾

1) 법적근거

고용영향평가란 정부가 재정을 투입한 사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정량적, 사전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2009년 고용정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고용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를 근거로 2010년에 각 부처에서 주요사업에 대한 시범 평가를 거쳤고 2011년부터 본격적인 평가를 시행하게 되었다(이혜경 외, 2017).

고용영향평가는 2009년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 및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23조를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2010년 각 부처 주요사업에 대한 시범평가를 거쳐 2011년 이후 본격적인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고용영향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정책이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이하 "고용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용영향평가를 요청하는 정책
2.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할 계획 또는 시행 중이거나 시행이 완료된 정책으로서 정책심의회에서 고용영향평가를 하기로 심의한 정책
3. 고용노동부장관이 직권으로 고용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4.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교육·연구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영향평가의 결과 고용안정 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책에 관하여 제언을 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1) 2019 재정사업 고용평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정리하였음.

- ⑥ 제5항에 따라 정책에 관하여 제언 또는 개선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⑦ 제2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고용영향평가의 요청 절차, 대상의 선정 및 방법, 정책에 관한 제언 또는 개선 권고 및 개선 대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어느 하나에 제2항에 따른 고용영향평가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이 재출연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2. 민간연구기관

2) 실행방법

고용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사업은 첫째, 고용률 70%로드맵 추진과제 등 일자리 창출 핵심사업, 둘째,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주요 재정지출사업(인프라, R&D, 산업육성, 노동, 복지, 관광 분야 등), 셋째,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법, 제도, 규제개선 정책, 넷째, 민간단체(경제단체, 노조, NGO 등) 및 일반국민이 제안하는 과제 등이다. 고용영향평가 결과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과 SOC·R&D 및 문화예술·보건복지 사업의 예산 편성시 활용될 수 있다.

2013년 고용영향평가가 현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한국노동연구원을 고용영향평가 전담센터로 지정하고 평가인력 확충 및 ‘고용영향평가지침’을 수립하게 되었다.

2019년 기준 평가대상 사업은 ① 2019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전체, ② 2020년 부처요구액 기준 연간 100억 이상 SOC 사업, ③ 2019년 인력양성, 창업기업지원, 사업화지원, 기업 50% 이상 참여 사업 유형으로 구분한 R&D 사업 전체, ④ 2020년 부처요구액 기준 연간 100억 원 이상 문화·예술 및 보건·복지분야 일자리 창출 사업, ⑤ 2019년 기재부·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결정한 재정사업이다. 제외 사항은 ① 기관 인건비 및 기본경비, ② 국가안보 및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업, ③ 국가간 협약·조약에 따른 사업, ④ 재난예방·복구 사업, ⑤ 법정무지출 사업, ⑥ 2019년 신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⑦ 기타 평가 실익 등을 감안 일자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이다.



평가 내용으로는 예산지출을 통한 직·간접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를 공통적으로 보며, 그 외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으면 그것도 평가대상이 된다.

〈표 II-1〉 고용영향평가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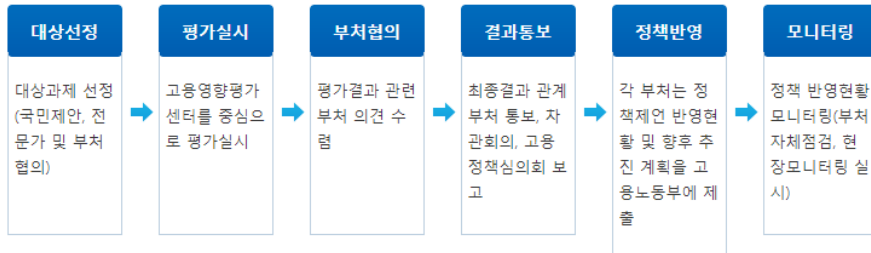
공통	예산지출을 통한 직·간접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 직접고용효과: 인건비 지출을 통해 직접적으로 고용하는 효과 간접고용효과: 사업비 지출(정부구매·조달 등)로 인해 산업별 제품·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간접적으로 창출되는 일자리 효과
추가고용효과	직접·간접효과 외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효과

평가 기준은 기획재정부 예산 구분 기준 세부사업 또는 내역사업 단위로 평가한다.

평가 방법은 사업유형별 산출식에 따라 직접고용효과와 간접고용효과 및 추가 고용효과를 합하여 10억 원 당 고용효과를 산출한다. 고용효과는 1년 단위로 산출하며, 취업 지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 단위로 환산(플타임 근로자 기준)하여 산출한다. 계속 사업은 '19년과 '20년의 예산사업 고용효과를 모두 산출하고, '20년 고용효과와 '19년 고용효과의 차이를 제시한다. 산출내역별 고용효과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고, 사업별 총 고용효과는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작성한다.

3) 추진체계

예산사업 고용영향평가에 따른 부처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전담평가를 한다. 예산서를 제출하면, 한국노동연구원(고용영향평가센터)이 전담평가하며, 이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하면, 전담기관에서는 이의신청 검토 및 평가결과를 안내하며, 각 부처는 평가결과를 예산서에 첨부, 기재부에 제출한다. 추진체계는 다음의 그림과 같다.



[그림 II-1] 고용영향평가 추진체계

출처: 한국노동연구원(고용영향평가센터) 사이트

4) 평가를 위한 지침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의 경우, 한국노동연구원에서 고용영향평가센터를 운영하면서 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매년 발간하고 있다. 동 지침서 내용을 보면, 크게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개요, 평가 산출식, 산출 예시(사례)로 구성되어 있다. 개요 부분에서는 평가 대상사업 및 적용 제외사업, 평가 내용, 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활용, 세부 추진일정의 네 가지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고용영향평가 산출식에는 고용효과 산출 방식이 사업별로 제시되어 있으며, 산출예시 영역에서는 양식, 산출예시, 평가 담당자 연락처가 제시되어 있다.

〈표 II-2〉 고용영향평가 지침 내용

구분	내용
개요	평가대상 사업 및 적용제외사업 평가내용, 방법 및 절차 평가 결과의 활용 세부 추진 일정
평가 산출식	사업유형별 고용효과 산출 방식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SOC사업, R & D 사업, 문화예술사업, 보건복지사업)
산출예시	고용영향평가 양식 고용효과 산출 예시 고용영향평가 담당자 연락처



2. 경쟁영향평가

1) 법적근거

경쟁영향평가는 정부 각 부처의 신설·강화 규제가 시장에서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전에 분석·평가하여 경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자유로운 기업활동과 소비자의 편익을 증가시키는 대안을 모색하는 제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에 따라 2008년에 도입되었다. 경쟁영향평가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여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이나 개인의 다양성, 창의성을 저해하는 행정규제나 제도를 평가해서 개선하는 것이다.

시장경제에서 경쟁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경쟁이 활성화되면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과 다양한 제품, 더 나은 품질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업자들 또한 더 많은 사업기회를 얻게 되어 시장은 활력을 찾고 경제도 살아나게 된다. 하지만 현실은 경쟁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공동이익을 보장한다는 불분명한 명분으로, 그리고 특정 여론이나 정치적 압력에 떠밀려 사회나 경제 상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나 배려 없이 규제가 남발되고 있다. 예컨대, 정부에서 소비자 안전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관련 시장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제품품질기준을 높이는 등의 규제를 강화하게 된다면 그 기준을 맞추 수 있는 사업자들이 줄어들게 되어 선택할 수 있는 제품의 종류가 적어지고 가격도 상승하는 등 결국엔 소비자인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경쟁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는 것이다(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OECD 경쟁위원회는 2007년 「OECD 경쟁영향평가 툴킷」을 제작하여 회원국에 사용을 권고하였고, 한국도 2009년부터 공정위가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경쟁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09년부터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영향평가가 제도화되었으며, 각 정부 부처 규제 업무 담당자들의 경쟁영향평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의 신설·강화를 억제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경쟁영향평가 매뉴얼(설명서)'을 발간·배포하고 있다.

2) 실행방법

경쟁영향평가 심사는 OECD 분석모델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예비평가와 심층평가, 두 단계로 나누어진다. 예비평가는 규제안에 대하여 경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있는지 파악한 다음 심층평가가 필요한 규제안인지 선별하는 과정이며, 심층평가는 규제안이 경쟁에 미치는 효과를 심층,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이다.

예비평가는 신설 및 강화되는 규제가 관련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아래 경쟁영향평가 점검목록의 4개 항목을 적용하여 점검한다.

경쟁영향평가 점검목록

만약 규제(안)이 다음의 네 가지 효과 중 어느 하나라도 가지고 있을 경우, 추가적인 경쟁영향평가가 수행되어야 한다.

(A) 공급자의 수 또는 범위에 대한 제한

규제안이 다음과 같다면 공급자의 수 또는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

1. 특정 공급자에게 상품 또는 용역 제공의 독점적 권리를 부여함
2. 사업의 요건으로 면허, 허가 또는 인가의 절차를 설정함
3. 일부 공급자의 상품 또는 용역 제공 능력을 제한함
4. 공급자의 시장진입 또는 퇴출비용을 크게 증가시킴
5. 공급자의 상품, 용역, 자본 그리고 노동의 흐름을 제한함

(B) 공급자의 경쟁능력 제한

규제안이 다음과 같다면 공급자의 경쟁능력이 제한될 수 있다.

1. 공급자가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함
2. 공급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광고 또는 마케팅 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함
3. 특정 공급자에게 더 유리하게 상품의 품질기준을 설정하거나,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할만한 수준 이상으로 품질기준을 설정함
4. 다른 공급자에 비해 일부 공급자의 생산비용을 크게 증가시킴

(C) 공급자의 경쟁유인 감소

규제안이 다음과 같다면 공급자가 적극적으로 경쟁할 유인이 감소될 수 있다.



1. 자율규제 또는 공동규제 체계를 형성함
2. 공급자에게 가격, 생산량 또는 매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함
3. 특정 산업의 활동 또는 공급자의 활동을 일반경쟁법 적용에서 배제함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규제안이 다음과 같다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가 제한될 수 있다.

1. 어떤 공급자로부터 구매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소비자의 능력을 제한함
2. 공급자를 변경하는데 필요한 전환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의 이동성을 감소시킴
3. 소비자가 효과적으로 구매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근본적으로 변경시킴

심층평가는 예비평가 결과, 4개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다음의 내용과 같이 규제로 인한 가격·산출량 변동, 상품·서비스의 다양성, 혁신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예비평가 및 심층평가 결과 신설 및 강화되는 규제가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견을 제시하고 합리적 대안을 권고한다.

심층평가 분석과정 5단계

1. 규제안에 대한 이해

- 규제안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규제안이 추구하는 목적 파악
- 규제안이 추구하는 목적이 사회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검토
- 규제안이 목적에 기여하는 이유 및 기여도 파악

2. 관련 시장의 정의

- 규제안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시장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경쟁영향 평가의 대상범위를 확정

3. 관련 시장의 현황 파악

-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의 양상과 특성을 정성적으로 묘사

4. 경쟁영향평가

- 경쟁제한의 범위 파악 : 규제 강화로 경쟁이 제한되는 시장의 범위 파악
- 경쟁제한의 효과 평가 : 시장에서 공급자의 자유로운 활동을 침해하는 정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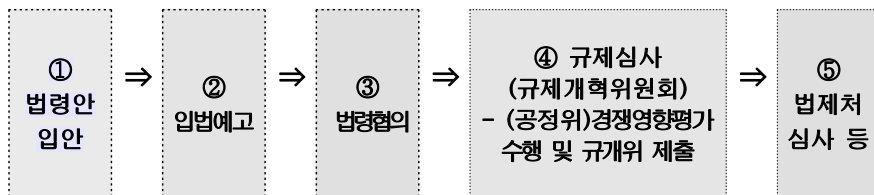
5. 대안의 제시

- 규제의 신설·강화로 인한 사회적 혜택보다 경쟁제한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더 크다고 판단될 경우, 경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대안 또는 방안을 모색

3) 추진체계

정부 각 부처는 규제를 도입하거나 변경할 때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규제개혁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각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규제안과 규제영향 분석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내어 경쟁영향평가를 의뢰한다. 이를 토대로 공정위는 경쟁영향평가를 실시한 뒤 나온 결과를 다시 규제개혁위원회에 보내면 이 결과를 참고하여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안을 최종심사하고 개선 권고, 철회권고 등의 결정을 내리는 절차로 진행된다.

경쟁영향평가는 신설·강화되는 법령(안)의 규제심사단계에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는 해당 규제(안)에 대한 경쟁영향평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는 절차를 따르고 있으며, 이러한 절차는 다음 그림과 같다.



⑥ 이후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국회이송 등의 절차 진행

[그림 II-2] 입법 과정에서의 경쟁영향평가 제도 실행 방법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18)



4) 평가를 위한 지침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2018년 전면개정된 OECD 경쟁영향평가 툴킷의 개정 내용과 최신 국내·해외 사례를 반영하여 경쟁영향평가 매뉴얼 제3집을 개발하였다.

경쟁영향평가 매뉴얼은 크게 6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서론 및 핵심 개념, 평가 실시(예비평가, 심층평가), 대안(대안의 제시, 대안의 비교, 권고안), 사후평가, 평가제도 운영과 기관간 역할분담, 그리고 부록(참고)으로 정리될 수 있다.

서론에서는 경쟁영향평가의 유형과 절차가, 핵심개념에서는 평가관련 주요 개념들이 제시되어 있다. 평가실시는 예비평가, 심층평가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대안에서는 평가를 통한 대안의 제시, 정성적·정량적 분석과 편익·비용 측정을 포함하는 대안의 비교,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고 제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권고안을 설명하고 있다. 평가운영과 기관간 역할분담에는 평가대상, 예비평가, 심층평가, 평가절차 및 기관간 역할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부록(참고)에서는 실제 사례와 법령 등을 포함하고 있다.

〈표 II-3〉 경쟁영향평가 지침 내용

구분	내용
서론 및 핵심개념	경쟁영향평가유형 경쟁영향평가절차 경쟁영향평가 핵심 개념 (시장지배력, 진입장벽, 신생기업의 진입, 기업의 퇴출, 혁신과 효율성, 경쟁자의 비용 상승 초래)
평가실시	경쟁영향평가 점검목록을 활용한 예비평가 잠재적 규제에 대한 심층평가
대안	대안의 제시 대안의 비교 권고안 (최적의 대안 제시, 권고안의 제시, 새로운 규제의 초안 작성, 최종 승인, 규제의 시행)
사후평가	-
평가 운영과 기관 간 역할분담	경쟁영향평가 대상 및 분석의 수준 예비평가 및 심층평가 평가 절차 및 기관간 역할분담
부록	참고자료(법령 등 제·개정 절차와 경쟁영향평가) 주요사례

3. 성별영향평가²⁾

1) 법적근거

「성별영향평가법」 제2조(정의) “성별영향평가”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의 목적은 정부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성차별 발생 원인 등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시키고 정책 수요자의 성별 특성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국민 만족도를 제고하는 것이다.

성별영향평가 및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법적근거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 「성별영향평가법」 및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법제업무 운영규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을 근거로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성별영향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성별영향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성별영향평가의 대상·방법·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2) 실행방법

성별영향평가 기관은 중앙 및 16개 지역(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에 소재하고 있으며, 중앙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다.

2) 2019년 성별영향평가 지침을 활용하여 정리하였음.



〈표 II-4〉 성별영향평가 기관

지역	구분	기관명	지정기간
서울	중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8. 5. 10 ~ '20. 12. 31
서울	지역	서울여성가족재단	'18. 1. 1 ~ '20. 12. 31
부산		부산여성가족개발원	'18. 1. 1 ~ '20. 12. 31
대구		대구여성가족재단	'18. 6. 25 ~ '20. 12. 31
인천		인천여성가족재단	'19. 1. 1 ~ '20. 12. 31
광주		광주여성재단	'19. 1. 1 ~ '20. 12. 31
대전		대전세종연구원	'18. 3. 20 ~ '20. 12. 31
울산		울산여성가족개발원	'18. 5. 21 ~ '20. 12. 31
경기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18. 5. 10 ~ '20. 12. 31
강원		강원여성가족연구원	'19. 1. 1 ~ '20. 12. 31
충북		충북여성재단	'18. 1. 1 ~ '20. 12. 31
충남		충남여성정책개발원	'18. 5. 28 ~ '20. 12. 31
전북		전북연구원	'18. 5. 21 ~ '20. 12. 31
전남		전남여성플라자	'18. 1. 1 ~ '20. 12. 31
경북		경북여성정책개발원	'18. 1. 15 ~ '20. 12. 31
경남		창원대학교	'18. 3. 20 ~ '20. 12. 31
제주		제주여성가족연구원	'18. 1. 1 ~ '20. 12. 31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이며, 여성가족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적용기관은 중앙행정기관(부·처·청, 위원회 등)과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시·도 교육청)이며, 적용기관이 성별영향평가를 작성하여 성별영향평가시스템(GIA)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예로 들면, 대상과제로 선정된 사업들은 다음의 지표를 활용하여 작성하여 GIA시스템을 통해 입력하면 된다.

〈표 II-5〉 성별영향평가 지표(사업)

성별영향평가 항목			점검 point
I. 정책환경의 성별특성	①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배경, 거주지역, 사회적 관계망, 폭력 등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성별 고정관념 등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 차이로 서로 다른 정책 수요가 발생하는 지 점검 • 고용형태, 직위, 수입, 근로조건 등 성별에 따른 경제적 차이로 서로 다른 정책 수요가 발생하는 지 점검 • 남녀의 신체적 차이로 인해 사업에 대해 서로 다른 정책 수요가 발생하는 지 점검
	② 사업수혜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수혜자 성비가 사업 대상자와 비교해 형평성이 있는지 점검 • 사업수혜발생에 있어서 성별특성을 반영하였는지 점검
	③ 예산배분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배분에 있어서 성별 특성을 반영하였는지 점검
II.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정책개선 및 환류)	법령 (지침)	④ 법령(지침 포함) 반영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에 대한 평가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법령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예산	⑤ 성인지 예산 반영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에 대한 평가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사업	⑥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에 대한 평가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업내용·수행방식(기타 제도 개선 포함) 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에 반영 등

한편, 특정성별영향평가는 대상정책에 대한 심층적 성별영향평가를 위하여 진행되는데, 이는 마찬가지로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다.

여성가족부가 실시하는 경우, 대상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며 대상정책은 시행 중인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또는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성평등 실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정책 및 사업(정책 수혜대상의 범위가 넓거나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사업 중 일반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하거나 성별 격차를 체감하는 사업) 등이다. 이 사업들을 심층적 성별영향평가를 위해 전문연구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실시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기업이다. 평가 대상은 시행 중인 조례·규칙,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향상이나 성평등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향상이나 성평등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이다. 이 평가는 (평가 위탁 기관) 대상정책에 대한 심층적 성별영향평가를 위하여 성평등 정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연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연구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3) 추진체계

성별영향평가는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정부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는 제도로, 위에 언급하였듯이 적용 기관은 중앙행정기관(부·처·청, 위원회 등)과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시·도 교육청)이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체크리스트와 성별영향평가서를 여성가족부에 제출해야 하며, 성별영향평가 및 특정성별영향평가 운영체계는 다음과 같다.

〈표 11-6〉 성별영향평가 운영체계

평가대상		각 기관	여성가족부
성별 영향 평가	중앙 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영향평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크리스트와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제출 - 평가서 검토를 위한 자료 제출(요청 시) • 반영계획제출(개선의견을 받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영향평가 검토 및 검토의견 통보 • 정책개선 실적 관리 • 성별영향평가 컨설팅·교육 프로그램 운영 • 부처별 성평등 목표를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선정, 협의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영향평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크리스트와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제출 • 반영계획 제출(개선의견을 받은 경우) • 성별영향평가서 검토 및 정책개선 실적관리는 각 기관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이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영향평가 컨설팅·교육 프로그램 운영
특정 성별 영향 평가	중앙 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정책에 대한 자료 제출 • 개선대책 수립·시행 및 반영계획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 정책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 반영결과 점검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정책개선 추진 및 반영결과 점검 • 대상 정책에 대한 자료 제출 • 개선대책 수립·시행 및 반영계획 통보 	
성별영향평가 결과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별 종합결과보고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국무회의) • 국회 제출 및 공표

출처: 여성가족부(2019)

구체적인 운영체계를 살펴보면 먼저, 법령 및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는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대상인지 제외인지에 따라 절차가 상이하다. 먼저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제외 대상인 경우, 계획안 마련 시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판단하기 위하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여성가족부 혹은 지자체 별 해당 기관의 성별영향평가책임관에게 제출한다. 제출된 체크리스트를 검토하여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제외대상 여부에 대해서 확인 후 15일 이내에 통보한다.

한편, 성별영향평가서 작성대상인 경우, 체크리스트와 성별영향평가서를 해당 기



관의 성별영향평가책임관에게 제출한다.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이 제출된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 통보서’를 작성하여 해당부서에 30일 이내에 통보를 하는데, 이때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사항 없음, 자체개선안 동의, 개선의견으로 구분하여 통보한다. 이 중 ‘개선의견’인 경우 해당부서는 추가적인 절차가 있는데, 개선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인 ‘반영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이 ‘반영계획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개선의견 수용’, ‘불수용’, ‘일부수용’, ‘중단’으로 표시한다. 법령 및 계획의 추진체계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II-7〉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대상인 경우의 추진체계(법령 및 계획)

중앙행정기관	단계 및 내용		지방자치단체
해당부처 (→여성가족부)	체크리스트 및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제출	부처(부서) 협의 시 체크리스트 및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	해당부서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여성가족부	검토의견 통보	성별영향평가서를 검토하여 해당부처(부서)에 ‘개선사항 없음’, ‘자체개선안 동의’, ‘개선의견’으로 결과를 통보 * 작성제외법령인 경우 ‘제외통보’ 개선사항없음, 자체개선안 동의로 통보받은 경우 절차 종료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해당부처 (→여성가족부)	반영계획 제출	검토의견 통보서의 결과가 ‘개선의견’ 인 경우 반영계획을 작성하여 제출	해당부서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여성가족부	반영계획 관리	해당부처(부서)에서 개선의견을 수 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및 관리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출처: 여성가족부(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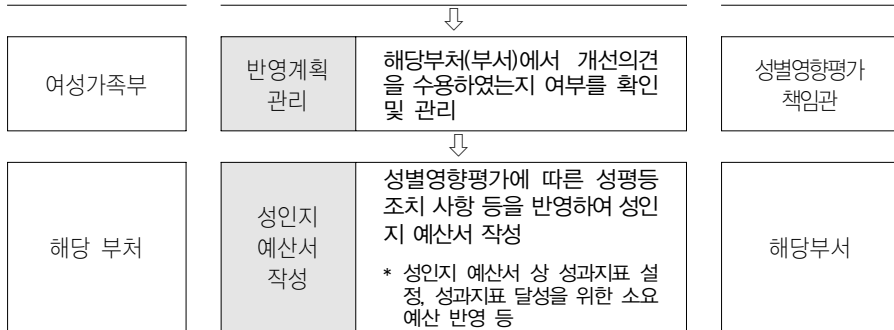
한편, 사업의 경우,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지 않고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관의 성별영향평가책임관에 제출하고 중앙행정기관은 여성가족부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이 제출된 성별영향평가서를 검토하고 ‘검토의견 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하는데, 이때 분석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사항 없

음’, ‘자체개선안 동의’, ‘개선의견’으로 구분하여 통보한다. 검토의견 통보서의 결과가 ‘개선의견’인 경우, 추가적인 절차가 있는데 해당부처/부서는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여가부 및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반영계획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개선의견 수용 · 불수용 · 일부수용 · 중단’으로 표시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추진체계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II-8〉 추진체계(사업)

중앙행정기관	단계 및 내용		지방자치단체
해당부처 (→여성가족부)	사업선정	(중앙) 여성가족부에서 제시한 사업을 고려하여 대상 사업을 협의한 후, 부처별 성평등 목표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대상사업 선정 * 여성가족부 대상사업 제시 → 협의 → 선정 (지방자치단체) 성평등목표와의 관련성, 지역 성평등 지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공통 주제를 중심으로 대상과제 선정 * 공통 주제를 고려하여 대상사업 발굴 → 지방위원회 심의 → 대상사업 선정	해당부서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해당부처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 제출	해당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및 제출	해당부서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여성가족부	검토의견 통보	성별영향평가서를 검토하여 해당부처(부서)에 ‘개선사항 없음’, ‘자체개선안 동의’, ‘개선의견’으로 결과를 통보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해당부처 (→여성가족부)	반영계획 제출	검토의견 통보서의 결과가 ‘개선의견’인 경우 반영계획을 작성하여 제출	해당부서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개선사항 없음’,
‘자체개선안 동의’로
통보받은 경우 절차
종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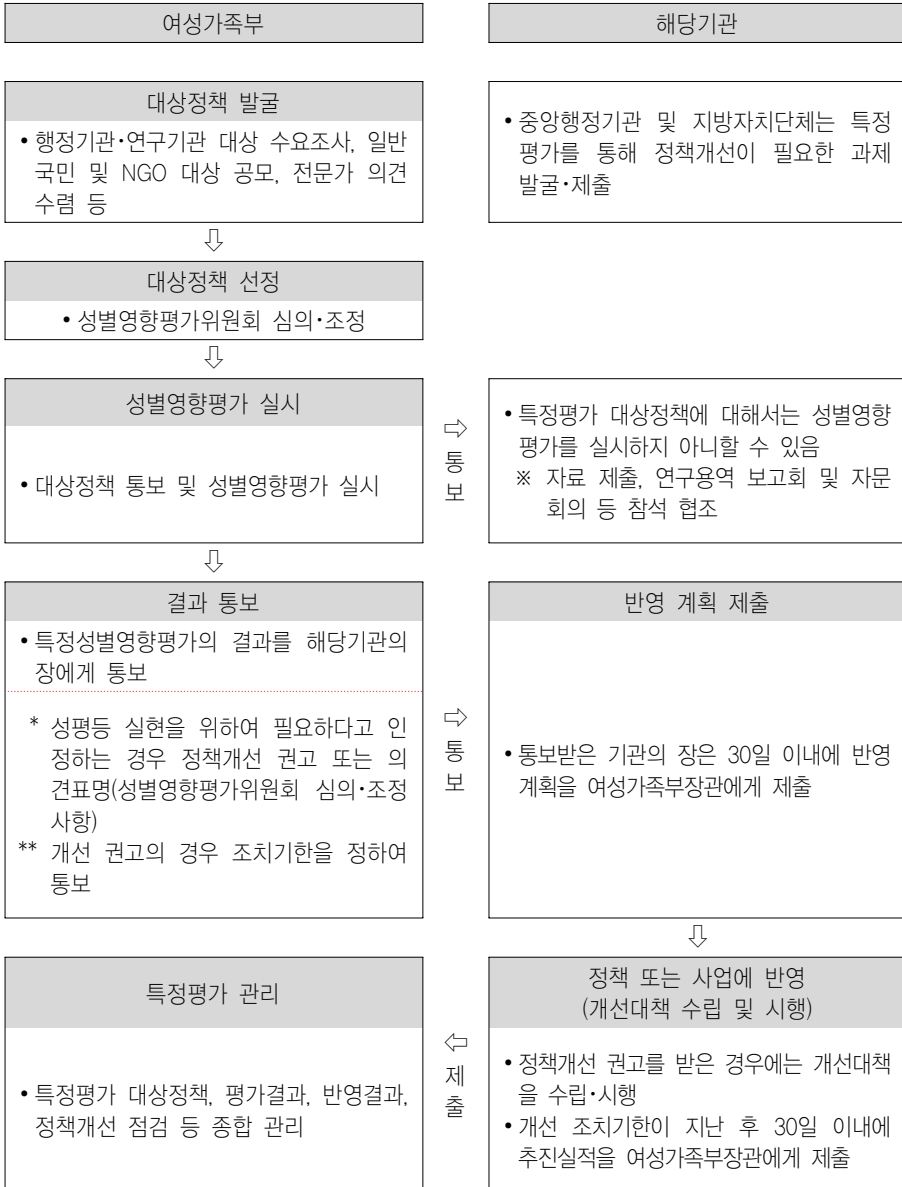


출처: 여성가족부(2019)

한편,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성별격차가 큰 주요정책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분석·평가하여 정책개선(안)을 도출하고 해당기관에 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하기 위해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사업은 첫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정책 중에서 정책 수혜대상의 범위가 넓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정책, 둘째, 시행중인 법령 중에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법령 분야, 셋째,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이다.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경우, 먼저 중앙행정기관일 경우, 대상정책 발굴 → 대상정책 선정 → 성별영향평가 실시 → 결과 통보 → 반영계획 제출 → 정책 또는 사업에 반영 → 특정평가 관리의 순으로 이뤄진다. 지자체의 경우, 대상정책 발굴 및 선정 →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 위원회 심의·조정 → 결과 통보 → 반영 계획 제출 → 정책개선 반영 결과 점검 순으로 이뤄진다.

〈표 II-9〉 중앙행정기관



출처: 여성가족부(2019)



〈표 II-10〉 지방자치단체

절차	담당주체	방법
대상정책 발굴 및 선정	기관담당부서	[수요조사] 행정기관·연구기관 대상 수요조사, 일반국민 및 NGO 대상 공모, 전문가 의견수렴 등 [선정]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 ※ 지역성별영향평가센터와 협의 가능
특정성별영향 평가 실시	기관담당부서, 연구기관 등	성평등 정책 관련 전문 연구기관 위탁 계약 또는 출자·출연 연구기관 자체 수행 대상정책 성별영향평가 실시 및 개선과제안 도출
위원회 심의·조정	기관담당부서	개선과제안에 대한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 통보	기관담당부서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담당부서 또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통보 ※ 정책개선 업무지시, 개선권고, 의견표명 등 중앙행정기관 소관 정책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건의
반영 계획 제출	평가 대상 정책 담당부서, 관계기관	통보받은 부서 또는 기관의 장은 성별영향평가 반영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
정책개선 반영 결과 점검	대상정책 담당부서, 기관담당부서, 관계기관	통보받은 부서 또는 기관의 장은 정책 반영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 반영결과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출처: 여성가족부(2019)

4) 평가를 위한 지침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여성가족부에서 매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을 발간하고 있으며, 2018년 지침에 따르면 크게 5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내용은 제도의 개요, 법령·계획·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 및 지원체계, 참고자료로 구분되어 있다.

제도의 개요에는 평가제도 개요, 평가 운영체계, 실적관리 및 분석보고, 주요일정, 주요 개정사항이 제시되어 있다. 두 번째 법령·계획·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각 평가별 개요, 평가대상, 평가절차, 단계별 세부작성 요령, 기관별 종합결과 보고가 제시되어 있다.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에는 개요, 정책개선 권고 및 이행점검, 평가절차가 제시되어 있다. 평가 운영 및 지원체계에는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의 역할, 평가시스템, 교육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대해서, 마지막 참고자료에는 관련 법령, 지난 평가 주요 개선사례, 부처별 성평등 실행목표, 주요 통계 DB사이트 등이 제시되어 있다.

〈표 II-11〉 성별영향평가 지침 내용

구분	내용
개요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평가실행	법령·계획·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정부홍보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통보서 및 반영계획서 서식 기관별 종합결과보고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개요 정책개선 권고 및 이행점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절차
운영지원체계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분석평가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성별영향분석평가시스템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민관협력체계 구축
참고자료	관계법령 전년도 평가 주요 개선사례 법률에 따른 3년 이상 중장기계획 목록 부처별 성평등 실행목표 지역 성평등 지수 지표 현황 공공시설·공간조성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주요 성인지 통계DB사이트



4. 아일랜드의 장애영향평가

1) 장애 관련 정책 추진 현황³⁾

아일랜드에서는 최근 새로운 국가장애포괄전략(the National Disability Inclusion Strategy, 2017~2021)을 발표하였는데, 동 전략은 실제적인 의미에서 장애인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정부가 참여하여 장애인이 자신의 잠재력을 달성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창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전략은 8가지 주요 영역에 114개의 구체적 행동을 포함하고 있는데, 평등 및 선택, 정책 및 공공서비스의 이용, 교육, 고용, 건강 및 웰빙, 개인 중심의 장애서비스, 지역사회 생활, 이동 및 접근성이 그 것이다.

전략의 실행을 위해 주요 정부 부서 및 기관, 장애 이해당사자로 구성된 운영 그룹에 의해 감독되고 있으며, 이 그룹은 국무장관이 의장직을 맡고 있다. 또한 이 전략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CRPD)의 의무 이행 진전을 지원할 수 있는 정부 부처 및 기관 전반의 모든 활동에 대한 중요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며, 전략의 핵심 조정기관은 정의평등부(Department of Justice and Equality)이다.

국가장애공단(the National Disability Authority : NDA)은 독립된 정부기관으로 관련 정부 부처 및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동 전략의 구현을 지원하고 또한 전략 기간 동안 진행 상황을 독립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한다. 국가장애공단은 법무 및 평등부의 관련 부서가 장애영향평가를 포함한 현재의 영향평가를 고려했다고 언급한다. 정책 제안을 고려할 때 장애영향평가를 가능한 한 빨리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정부를 위한 제안서(memoranda)의 준비를 지원한다. 이는 프로세스의 후단계에 정보를 알리는 관점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조기에 파악하여 정부에 대한 제안서가 작성되는 단계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제안서가 작성되는 시점에서부터 장애에 대한 것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아일랜드 정의 및 평등부에서는 국가장애공단과 함께 정부에 제안서를 제출하는 정부부처 공무원들을 돕기 위해 소책자(매뉴얼)를 개발하였다. 이에 다음에서는 소책자에 포함된 주요한 내용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3) 아일랜드 정의평등부 사이트 내용을 발췌·번역함.

2) 장애영향평가 실행 방법⁴⁾

아일랜드 정의평등부(Department of Justice and Equality)에서는 장애영향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단계별 프로세스를 설명하고 있는 정부 지침을 마련하여 정부 부처 공무원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아일랜드의 장애영향평가는 정부의 장애 방지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가 요구하는 모든 실질적 제안, 즉 정책 변화, 기존 계획의 도입, 폐지 또는 중요한 변경, 대중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 입법안의 초안 작성 또는 승인, 지출 증가 또는 감소를 포함하는 결정과세의 변화 등에 있어,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실행한다.

2005년에 제정된 아일랜드 장애법(the Disability Act)에 의한 장애 정의를 보면, "사람과 관련된 장애란 장기적 신체적, 감각적, 정신 건강 또는 지적 장애의 이유로 국가 내에서 직업, 사업 또는 직업을 수행하거나 국가의 사회 또는 문화적 삶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상당히 제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아일랜드 정부의 장애영향평가 실제 사례 중 '도심지역 교통관리 설계'와 관련하여 장애발생 가능성 등 영향을 파악하여 문제를 파악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사례가 있다. 여기에서는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교통관리 계획을 위해 보행자 및 기타 취약한 사용자에게 도로작업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고, 최종 실행되기 전 재설계 등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책입안자들이 장애영향평가 개념과 실행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 세 가지 설득력 있는 주장이 있다.

첫째, 사회의 정의목표 성취이다. 민주주의와 평등의 맥락에서 장애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평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전 예방적인 조치가 추구되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도덕적 의무가 있다. 이와 관련된 정부의 약속은 국가장애 전략, 사회통합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품질고객서비스 이니셔티브(the quality customer service initiative)와 같은 일련의 정책과 전략 계획으로 설정된다.

둘째, 효용성과 효율성이다. 조직은 내부적으로 인적 자원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현장 요구를 파악하고 해결함으로써 효용성과 효율성을 개선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접근성을 고려하는 설계 프로세스의 초기 단계일수록 더 효과

4) Ireland Department of Justice and Equality(2012). 내용을 발췌번역함. 작성 양식은 부록 별첨.



적이고 비용이 적게 든다. 효용성 및 효율성 평가를 위한 프레임워크에는 개선된 규제 이니셔티브와 규제영향분석 프로세스가 포함된다.

셋째, 법적 의무 이행이다. EU 및 국내의 정책입안자와 실무자는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차별을 퇴치(고용평등법, 1998-2011과 동등지위법, 2000~2011)하는 법안과 장애인의 참여를 촉진하는 법(장애법, 2005)이 제정되었다.

결국, 장애영향평가는 본질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그들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주류화(mainstreaming)를 지원한다.

본 지침에서는 장애영향평가를 수행하는 정부를 위한 제안서(memoranda)에서 5단계에 걸쳐 설명하고 있다. 5단계 장애영향평가 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해당 부서가 수행하도록 제안하는 어떤 행동이나 목표에 대해 제기되어야 하며 정부에 제출된 실질적인 비망록의 대상이 될 5가지 질문의 집합이다. 그런 다음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은 정부를 위한 비망록 초안의 영향 섹션에 통합되어야 한다. 프로세스에는 특정 전문지식과 부서 외부의 관련 대표 기관의 참여와 같은 외부 지원이 포함될 수 있다.

장애영향평가 절차는 제안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한 조기에 착수하여 가능한 경우 협의의 근거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장애영향평가 문서는 변경 대상인 살아있는 문서로서 최종본이 완성되기 전에 수많은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이는 특히 장애영향평가에 대한 초기 작업에서 제안서와 관련된 유의미한 영향을 일부 드러내는 경우에 해당된다.

장애영향평가는 다음과 같이 단계별 접근방식으로 실시한다.

(1) 1단계 : 제안된 결정이 장애인에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예 혹은 아니오?

1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이 일련의 질문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 만약 이 조치가 일반적인 적용 중 하나라면, 장애인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 만약 그것이 다른 그룹의 사람들을 향한 것이라면, 이 그룹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포함할 수 있는가?
- 만약 그것이 어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향한 것이라면, 다른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 그 조치가 목표 인구 이외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그 사람들이 장애가 있을 수 있는가?

위의 질문을 고려하기 전에, 국가 장애 기관의 온라인 모듈인 "공무원을 위한 장애 평등 교육" (<http://elearning.nda.ie>)을 살펴볼 것을 권하고 있다. 이 모듈은 장애인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직원을 양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또한 오디오 출력이 있는 컴퓨터가 이용 가능한 곳이라면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CD로도 제공될 수 있다.

(2) 2단계 : 잠재적 영향에 대한 초기 평가 기반의 증거 개요 설명

이 단계에는 영향의 초기 평가와 관련된 모든 관련 데이터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포함된다.

물리적 설계, 정보 내용 및 정보 표시 방법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용할 수 있는 증거로는 장애에 관한 중앙통계국 자료, 접근성 표준에 관한 국가장애국의 조언, 제출물, 정책 자료, 연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관련 증거를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수집할 수도 있다. 고려해야 할 중요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 그 협의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가? 예를 들어 서면 협의, 공개 회의, 포커스 그룹 등
- 누구와 논의하였는가?
- 다른 유형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상담에 접근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그들이 참여하였는가?

(3) 3단계 : 만약 당신이 그 결정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 대략적으로 설명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모두 간략하게 기술하고, 다른 장애(물리적, 감각적, 지적 및 정신적 건강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장애인구는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며 동일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모두 유사한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잠재적으



로 다른 욕구를 고려하여야 한다.

- 휠체어를 사용하는 여성 및 남성
- 청각장애가 있는 고령자 및 청년
-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
-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남성 및 여성
- 장애가 있는 이주 노동자

(4) 4단계 : 장애인에 대한 잠재적 영향이 부정적이라면, 그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려는 방법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

이 단계에는 확인된 각 부정적 영향을 검토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제안을 수정할 수 있는 방법(부정적 영향을 극복하는 방법)을 식별하는 작업이 포함된다. 그러한 대안을 개발할 때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5) 5단계 : 시간 경과에 따른 장애인의 영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취해지는 모든 조치를 개략적으로 설명

또한 모범 사례에 따라 조치가 장기적 영향을 모니터링해야 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논의(consultation)는 추가 계획, 구현 및 검토 단계를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도움이 될 만한 자원들의 목록도 본 지침에는 다루고 있다. 접근성과 관련해서는 국가 장애위원회(National Disability Authority), 보조기술은 아일랜드 시민 지원 정보위원회(Assist Ireland Citizens Information Board), 교육문제는 전국특수교육협의회, FAS 서비스가 있다. 또한 평등법제와 관련해서는 평등부(The Equality Authority), 티퍼리 주사무소(Tipperary Office), 더블린 주사무소(Dublin Office) 등을 제시하였다.

5. 소결

본 장에서는 유사 영향평가제도 평가의 법적근거, 실행방법과 추진체계, 그리고 평가실행을 위한 지침 내용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고용영향평가는 고용정책기본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2010년 시범평가를 거쳐 2011년 이후 본격적인 평가를 시행하게 되었으며, 한국노동연구원을 고용영향평가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즉, 고용영향평가에 따른 부처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공무원이 직접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아닌 전문기관을 통해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산업별 고용에 따른 효과, 근로조건 개선을 통한 고용 효과 등과 같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구보고서의 형태로 제시하고 있다. 평가 이후 해당 부처에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검토 및 평가결과를 안내하는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한국노동연구원에서 평가 가이드라인은 매년 발간하고 이를 활용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동 가이드라인 내용을 보면, 크게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개요, 평가 산출식, 산출 예시(사례)로 구성되어 있다. 개요 부분에서는 평가 대상사업 및 적용 제외사업, 평가 내용, 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활용, 세부 추진일정의 네 가지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고용영향평가 산출식에는 고용효과 산출 방식이 사업별로 제시되어 있으며, 산출예시 영역에서는 양식, 산출 예시, 평가 담당자 연락처가 제시되어 있다.

경쟁영향평가는 정부 각 부처의 신설·강화 규제가 시장에서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전에 분석·평가하여 경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자유로운 기업활동과 소비자의 편익을 증가시키는 대안을 모색하는 제도이다. 경쟁영향평가 역시 OECD의 권고에 따라 도입·실행되었으며, 공정거래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고용영향평가와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부처(서)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닌 전문기관을 통해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OECD 톨킷에 근거한 매뉴얼을 발간·배포하고 있다. 동 매뉴얼의 서론에서는 경쟁영향평가의 유형과 절차가, 핵심개념에서는 평가관련 주요 개념들이 제시되어 있다. 평가실시는 예비평가, 심층평가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대안에서는 평가를 통한 대안의 제시, 정성적·정량적 분석과 편익·비용 측정을 포함하는 대안의 비교,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고 제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권고안을 설명하고 있다. 평가운영과 기관간 역할분담에는 평가대상, 예비평가, 심층평가, 평가절차 및 기관간 역할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부록(참고)에서는 실제 사례와 법령 등을 포함하고 있다.

성별영향평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법령, 계획, 사업 추진담당 부처(서)에서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며,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전담 기관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또한 매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을 발간하며 평가담당자 대상 교육 및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동 지침에 따르면, 제도의 개요에는 평가제도 개요, 평가 운영체계, 실적관리 및 분석보고, 주요일정, 주요 개정사항이 제시되어 있다. 두 번째 법령·계획·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각 평가별 개요, 평가대상, 평가절차, 단계별 세부작성 요령, 기관별 종합결과 보고가 제시되어 있다.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에는 개요, 정책개선 권고 및 이행점검, 평가절차가 제시되어 있다. 평가 운영 및 지원체계에는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의 역할, 평가시스템, 교육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대해서, 마지막 참고자료에는 관련 법령, 지난 평가 주요 개선사례, 부처별 성평등 실행목표, 주요 통계 DB사이트 등이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유사영향평가제도의 상황과 선행연구들을 고려해볼 때, 장애영향평가는 법령 및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각 부처(서)의 공무원이 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전담기관에서 검토하도록 하는 절차로 진행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또한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사례처럼, 각 부처(서)에서 제출된 장애영향평가 결과 중 장애차별해소를 위해 개선이 시급한 정책이나 계획이나 사업에 대해서는 전담기관에 특정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로 추진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유사 영향평가의 사례를 통해 장애영향평가 지침은 서론에 해당하는 영향평가의 이해와 장애영향평가 실시(법령, 계획), 장애영향평가 운영 및 지원체계, 기타 참고자료 등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 부처(서)의 공무원이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참고·활용할 수 있는 지침안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영향평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업무에 적용 가능할 수 있는 자료를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다.

Ⅲ 장애영향평가 지침을 위한 의견조사

1. 조사개요

1) 조사대상

(1) 델파이 조사

본 연구의 델파이조사는 장애영향평가 지침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장애계(장애인단체) 및 유사영향평가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장애계는 장애영향평가 및 장애인지제도 연구경험이 있는 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DPI 등의 장애인단체로 하되 관련 연구에 참여한 경력이 있거나 세미나 또는 토론회에 참여하여 관련된 내용을 발표한 경력이 있는 사무(국)총장, 실장이 참여하였다. 또한 유사영향평가 전문가는 성별영향평가 주관기관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중앙)와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를 대상으로 하되 관련 업무의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각 기관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는 총 10명이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Ⅲ-1〉 델파이 조사 참여자

연번	성별	종사 분야	직위	근무지
1	남	장애계	전) 소장	-
2	남	장애계	사무차장	서울
3	남	유사영향평가 전문가	교수	경기
4	남	장애계	정책국장	서울
5	남	장애계	사무총장	서울
6	여	유사영향평가 전문가	실장	서울
7	남	장애계	실장	서울
8	남	장애계	실장	서울
9	여	장애계	교수	충북
10	남	장애계	회장	제주



(2) 전문가 의견조사

공무원대상 조사는 장애영향평가 향후 시행될 때 평가서를 직접 작성해야 하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장애영향평가 지침의 적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장애인복지 업무 경험이 있는 공무원 또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의견을 청취하였다. 본 조사에 참여한 공무원은 총 5명으로, 섭외한 6명 중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인 1명이 조사에 불참하여 최종 의견조사에 참여한 공무원은 다음 표와 같다.

〈표 III-2〉 전문가 의견조사 참여자

연번	성별	직위	근무지
1	여	팀장	충남
2	여	전) 계장	대구
3	여	주무관	부산
4	남	주무관	인천
5	남	주무관	서울

2) 조사내용

(1) 델파이 조사

장애영향평가 지침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기 위해 유사영향평가의 지침 또는 매뉴얼의 내용을 우선 정리하였고, 이를 토대로 델파이조사지를 구성하였다. 델파이 조사는 연구주제에 관련된 사람들을 조사참가자로 하여, 면밀하게 기획된 익명의 설문지 조사를 반복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조사참가자들이 직접 한곳에 모여 논의를 하지 않고서도 집단성원의 합의를 유도해 낼 수 있는 일종의 집단협의 방법으로, 본 연구의 조사방법으로 적절하다.

본 연구에서는 총 2회에 걸쳐 델파이조사를 실시하며, 1차 델파이조사는 장애영향평가 지침 구성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① 지침 전체 구성, ② 장애인지제도 소개, ③ 장애영향평가 구성요인, ④ 장애영향평가 실행, ⑤ 장애영향평가 지원체계, ⑥ 장애영향평가 참고자료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각 영역에 대한 세부 항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III-3〉 1차 델파이 조사 항목

대분류	중분류
지침 전체 구성	제도 이해 장애영향평가 이해 장애영향평가 실시 장애영향평가 운영 및 지원 기타 참고자료
장애인지제도 소개	장애인지제도 장애인지예산 장애영향평가 장애분리통계
장애영향평가 구성요인	장애영향평가의 개념 장애영향평가의 운영체계
장애영향평가 실행	법령에 대한 평가실시 계획에 대한 평가실시 장애영향평가 관련 서식 장애영향평가 결과보고
장애영향평가 지원체계	장애영향평가 주체 장애영향평가 지원 및 교육
장애영향평가 참고자료	주요 법령 목록 유사 영향평가 제도 법령에 따른 3년 이상 중장기계획 목록

대분류에 따른 중분류들에 대해서 중요도(1점 낮음~6점 높음)를 체크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고, 제시된 중분류외의 추가 내용이 있으면, 추가하여 중요도를 체크하도록 하였다. 조사지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조사지의 일부를 추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III-4〉 1차 델파이 조사지 구성 예시(세부내용 부록 5 제시)

대분류	요인 선정 중요도					
	1 (낮음)	2	3	4	5	6 (높음)
장애영향평가 개념						
법령·계획에 대한 장애영향평가						
장애영향평가 운영체계						
장애영향평가 참고자료						
〈기타 추가의견 기술요망〉						
〈기타 추가의견 기술요망〉						

2차 델파이 조사는 1차 조사지 양식과 동일하며, 1차 조사결과(용어수정, 평균점수, 응답자 점수)를 추가하여 제시하고, 추가적 요인에 대한 중요도 조사 실시(응답자별 결과를 정리하여 개별 이메일 발송)하였다. 2차 조사지의 예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III-5〉 2차 델파이 조사지 구성 예시(세부내용 부록 6 제시)

대분류	1차 델파이 결과		요인 선정 중요도					
	귀하 응답	전체 평균	1 (낮음)	2	3	4	5	6 (높음)
장애영향평가 개념								
법령·계획에 대한 장애영향평가								
장애영향평가 운영체계								
장애영향평가 참고자료								
〈기타 추가의견 기술요망〉								
〈기타 추가의견 기술요망〉								

(2) 전문가 의견조사

델파이 조사를 통해 완성된 지침구성안은 향후 장애영향평가가 도입되어 실행될 경우, 직접 담당할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장애영향평가 지침안에 대한 구성 및 내용 적절성, 사용 용어의 적절성, 지침 활용도 제고를 위한 의견, 기타의견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3) 분석방법

(1) 델파이 조사

장애영향평가 지침안을 구성하기 위해 델파이조사를 2회에 걸쳐 실시하며, 1회차 조사에서는 지침안 구성의 적절성과 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며, 2차 델파이 조사는 1차 조사결과(용어수정, 평균점수, 응답자 점수)를 함께 제시하고, 추가적 요인에 대한 중요도 조사를 실시(응답자별 결과를 정리하여 개별 이메일 발송)하며, 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기술분석(빈도, 비율, 평균, 표준편차)을 하였다.

(2) 전문가 의견조사

전문가 의견조사는 델파이 조사를 통해 수정 및 보완된 장애영향평가 지침(안)에 대하여 각 영역별 의견을 조사하고자 이메일 조사를 실시하였고, 영역별(장애영향평가 지침안에 대한 구성 및 내용 적절성, 사용 용어의 적절성, 지침 활용도 제고를 위한 의견, 기타의견 등)로 정리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2. 델파이조사 결과

1) 1차 델파이조사 결과

(1) 지침 전체 구성

지침 전체 구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도 이해 5.2점, 장애영향평가 실시 5.2점, 영향평가 운영 및 지원 5.1점, 장애영향평가 이해 5.0점, 기타 참고 자료 4.1점 순으로 나타났다. 제도의 이해의 경우, 장애영향



평가가 제도가 된 후, 그 이후로부터는 해당 관련자들이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기에 이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추후 차츰 생략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한편, 장애영향평가 이해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1건(1점) 있었는데, 이는 ‘제도 이해’와 ‘장애영향평가 이해’가 중복되기 때문이며, 장애인지제도에 대한 필요성, 의의, 관련 법령 근거 등이 종합적으로 ‘제도이해’에서 제시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았다. 1차때 제시된 지침 전체 구성 외에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할 세부영역으로 장애영향평가의 효과(5점)에 대해 제시하였다.

〈표 III-6〉 지침 전체 구성에 대한 의견(1차)

점수	제도 이해		장애영향평가 이해		장애영향평가 실시		장애영향평가 운영 및 지원		기타 참고 자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점	—	—	1	10.0	—	—	—	—	—	—
2점	—	—	—	—	—	—	—	—	—	—
3점	—	—	—	—	—	—	—	—	2	20.0
4점	3	30.0	—	—	2	20.0	2	20.0	6	60.0
5점	2	20.0	5	50.0	4	40.0	5	50.0	1	10.0
6점	5	50.0	4	40.0	4	40.0	3	30.0	1	10.0
전체	10	100.0	10	100.0	10	100.0	10	100.0	10	100.0
Mean (SD)	5.2(.92)		5.0(1.49)		5.2(.79)		5.1(.74)		4.1(.88)	

기타 의견으로는 유사 사례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제시하였고, 특히 외국사례 혹은 우리나라에서 잘 시행되고 있는 성인지예산제도의 소개를 통해 장애영향평가의 필요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2) 장애인지제도 소개

지침서의 첫 부분인 장애인지제도 소개 부분에 대한 델파이조사 결과, 중요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장애분리통계 영역(5.7점), 장애영향평가(5.5점), 장애인지제도(5.3점), 장애인지예산(5.1점)순으로 나타났다. 이 영역에서 제시된 추가 영역으로는 제도 도입 후 변화(5점), 장애인 참여(6점)이 있으며, 특히 제도 도입 후 변화 항목은 정책결정과정의 변화를 표나 이미지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

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변화 항목을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지침에서는 제외하였다.

〈표 III-7〉 장애인지제도 소개에 대한 의견(1차)

점수	장애인지제도		장애인지예산		장애영향평가		장애분리통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점	—	—	—	—	—	—	—	—
2점	—	—	—	—	—	—	—	—
3점	—	—	—	—	—	—	—	—
4점	1	10.0	1	10.0	—	—	1	10.0
5점	5	50.0	7	70.0	5	50.0	1	10.0
6점	4	40.0	2	20.0	5	50.0	8	80.0
전체	10	100.0	10	100.0	10	100.0	10	100.0
Mean (SD)	5.3(.68)		5.1(.57)		5.5(.53)		5.7(.68)	

기타 의견으로는 명칭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먼저, 장애인지제도는 장애인지제도의 개념으로 변경하여 목표, 기대되는 성과, 취지 등을 포함하여 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아니면 ‘장애포괄제도’ 라고 변경하여 보다 더 큰 범위의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장애분리통계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인지할 수 있는 통계 생산’ 으로 변경이 필요하며, 여기에 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현황,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분리통계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는 현재 대부분의 장애정책이 중증장애인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장애정도와 상관없이 포괄적인 제도로의 전환도 중요하며, 이를 대비한 통계의 지속적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3) 장애영향평가 구성요인

장애영향평가 구성요인으로는 장애영향평가 개념, 운영체계를 제시하였고 전반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장애영향평가 개념 5.1점, 운영체계 4.9점 순이었다. 반면, 장애영향평가 개념 2점, 운영체계 3점을 제시한 전문가도 있었다. 장애영향평가 개념의 중요도가 낮다고 판단한 한 전문가는 장애영향평가의 개념은 장애인지제도 소개의 서두에 제시될 필요가 있으며, 운영 체계 안에 ‘장애영향평



가 주체'가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제시된 장애영향평가 구성요인 항목 외에 추가로 필요한 항목으로 제시된 것은 장애영향평가의 적용(개선)(6점), 장애영향평가의 절차(6점), 장애감수성 여부(6점), CRPD 기본원칙 달성 여부(6점), 장애영향평가의 대상(5점)이었다. 그러나 장애영향평가의 대상과 적용, 절차 등은 장애영향평가 실행 영역에서 다루고 있어 반영하지 않았으며, 장애감수성 여부, CRPD 기본원칙 달성은 제도소개 부분에서 장애영향평가 필요성을 언급하며 제시하는 것으로 반영하였다.

〈표 III-8〉 장애영향평가 구성요인에 대한 의견(1차)

점수	장애영향평가 개념		운영체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점	—	—	—	—
2점	1	10.0	—	—
3점	—	—	2	20.0
4점	1	10.0	—	—
5점	3	30.0	5	50.0
6점	5	50.0	3	30.0
전체	10	100.0	10	100.0
Mean (SD)	5.1(1.29)		4.9(1.10)	

기타의견으로는 첫째,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에서 장애인지제도는 장애인인권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으나, 지침서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장애인인권에 초점을 둔다는 의미는 국가적 체계로 시행되는 각종 정책을 장애감수성에 기반을 둔 평가지표를 이용하여 평가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장애감수성에 기반을 둔 평가지표를 구성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자료는 CRPD이며, 정부시책을 평가하는데 CRPD의 각 조항의 목적을 얼마나 충실하게 결과 혹은 사회적 효과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평가되어야 한다. 특히 CRPD 제3조 일반원칙을 구성하는 항목에 의해 정부의 모든 정책이 평가되어야 하며, 장애영향평가 구성요인의 세분화에 대해서는 장애영향평가의 절차 설명이 필요하며, 이 부분은 '장애영향평가의 운영체계'에 통합하여 설명할 수도 있겠으나 다른 분류에 비해 '구성요인' 부분의 중분류 항목이 너무 적어서 '운영체계'를 좀 더 세분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하였다. 셋째, 장애영향평가의 개념에서 평가의 목적과 활용 목표, 효과 등 명확한 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장애영향평가의 개념보다는 장애영향평가의 목표, 영향평가의 운영체계, 영향평가의 적용과 개선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기술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는 의견도 있었다. 넷째, 장애영향평가의 대상을 정하는 일은 장애영향평가의 평가분석의 틀, 평가방식 등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이러한 조건들은 결국 평가의 성과와 영향을 미치게 될 듯하다. 따라서 평가의 대상의 조건과 범위 등에 따라서 성과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대상을 명확히 하고 이 대상들에게 장애영향평가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해 장애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4) 장애영향평가 실행

장애영향평가 실행 영역에는 법령에 대한 평가실시, 계획에 대한 평가실시, 장애영향평가 관련 서식, 장애영향평가 결과 보고가 있으며, 전반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편이며, 장애영향평가 결과 보고 5.5점, 법령에 대한 평가실시 5.4점, 계획에 대한 평가실시 5.4점, 장애영향평가 관련 서식 4.6점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장애영향평가 관련 서식에서 2점을 준 전문가도 있었는데, 단순한 서식이라면 부록으로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에서이다. 장애영향평가 실행 영역에 그 밖에 정책/제도 개선 이행점검(6점), 사업에 대한 평가실시(6점), 모니터링 영역 추가(6점)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표 III-9〉 장애영향평가 실행에 대한 의견(1차)

점수	법령에 대한 평가실시		계획에 대한 평가실시		장애영향평가 관련 서식		장애영향평가 결과 보고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점	—	—	—	—	—	—	—	—
2점	—	—	—	—	1	10.0	—	—
3점	—	—	—	—	—	—	—	—
4점	1	10.0	1	10.0	3	30.0	1	10.0
5점	4	40.0	4	40.0	4	40.0	3	30.0
6점	5	50.0	5	50.0	2	20.0	6	60.0
전체	10	100.0	10	100.0	10	100.0	10	100.0
Mean (SD)	5.4(.70)		5.4(.70)		4.6(1.17)		5.5(.71)	



기타 의견으로는 첫째, 계획에 대한 평가의 경우, 계획에서 호평을 얻었다고 해서 결과에서 호평을 받는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없어 다소 장애인정책종합 5개년 계획처럼 전형적인 전시행정에 불과할 수도 있다. 따라서 계획과 결과에 관하여 동시에 비교하여 함께 평가되어야 한다. 둘째, 평가 실제사례를 제시하거나 모니터링의 항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장애영향평가가 법령과 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면, 각각의 중분류 내에 누가, 어떤 법령이나 계획을 대상으로, 어떻게(평가지표) 평가하고, 해당 내용을 누구에게 보고하고, 보고 이후에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일련의 절차와 내용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업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현재, 법령과 계획만 있는데, 법령과 계획에 대한 평가만을 하게 되면 앞으로 행해질 정책에만 장애영향평가가 될 것 같다. 또한 현장에서 진행되는 정책사업 중에 장애인이 소외되는 경우가 많으니 사업 평가를 빼는 건 부적절하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한 지침서에서는 서식의 실제 적용사례를 제시하였으며, 사업 영역의 평가를 추가하여 제시하였다.

(5) 장애영향평가 지원체계

장애영향평가 지원체계에는 장애영향평가 주체와 장애영향평가 지원 및 교육이 있으며, 이에 대해 전반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장애영향평가 주체 5.4점, 장애영향평가 지원 및 교육 5.1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영향평가 계획 수립(6점), 장애영향평가 평가매뉴얼 보급(6점), 민관협력체계 구축 항목(6점) 추가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장애영향평가의 대상이 담당 공무원 등 장애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들의 장애정책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도 등에 따라서 그 결과의 편차가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일정한 수준의 장애이해나 정책의 이해도 등을 위한 매뉴얼이 필요하다. 또한 장애영향평가를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도 하겠지만 민간기관 등에서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 당사자나 민간 부문에서 느끼는 것과 정부의 정책은 격차가 있기 때문이다. 장애영향평가를 공공과 민간이 같이 해도 효과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관협력체계는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단체의 참여, 모니터링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표 III-10〉 장애영향평가 지원체계에 대한 의견(1차)

점수	장애영향평가 주체		장애영향평가 지원 및 교육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점	—	—	—	—
2점	—	—	—	—
3점	—	—	—	—
4점	—	—	1	12.5
5점	5	62.5	5	62.5
6점	3	37.5	2	25.0
전체	8	100.0	8	100.0
Mean (SD)	5.4(.52)		5.1(.64)	

기타 의견으로는 ‘장애영향평가 지원체계’에서 ‘장애영향평가 주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다소 어색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주체는 장애영향평가에 관계되는 모든 기관과 전문가, 주무부처 등이 포함되고, 평균값이 높아 그대로 두었다.

(6) 장애영향평가 참고자료

장애영향평가 참고자료에는 주요 법령 목록, 유사 영향평가 제도, 법령에 따른 3년 이상 중장기계획 목록이 있으며, 전반적으로 중요도가 높았으며, 주요 법령 목록 5.1점, 법령에 따른 3년 이상 중장기계획 목록 5.0점, 유사 영향평가 제도 4.3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사 영향평가 제도가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전문가도 있었다. 그 이유로는 지침은 실무에서의 법제와 같은 영향을 가지는 공식 문서이므로, ‘유사 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설명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특히, 성별영향평가와 유사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 바, 장애영향평가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 영역에 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협약 자료(6점), 장애인정책 종합계획과의 연계성(6점), 장애영향평가 주요 개선사례(6점) 항목의 추가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지침서는 평가 시행 전 단계에서만 들어졌고, 초기에는 이해를 돕기 위해 유사사례가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하여 추가하였다.



〈표 III-11〉 장애영향평가 참고자료에 대한 의견(1차)

점수	주요 법령 목록		유사 영향평가 제도		법령에 따른 3년 이상 중장기계획 목록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점	—	—	1	10.0	—	—
2점	—	—	—	—	—	—
3점	—	—	—	—	—	—
4점	3	30.0	4	40.0	2	20.0
5점	3	30.0	4	40.0	6	60.0
6점	4	40.0	1	10.0	2	20.0
전체	10	100.0	10	100.0	10	100.0
Mean (SD)	5.1(.88)		4.3(1.34)		5.0(.67)	

기타 의견으로는 첫째, 장애영향평가 실행 부분에서 제시된 장애영향평가 관련 서식도 본 장애영향평가 참고자료에 추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둘째,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새로운 정부의 출발과 함께 5년간 시행되는 중기적이며, 지속적인 종합계획이다. 또한 정부의 공약정책 등이 포함되어 실천적 여건이 큰 만큼 장애영향평가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연계하여 보완하고 정책실행 가능성을 높이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셋째, 제도 시행 첫해 이후부터는 장애영향평가를 통해 개선된 사례의 추가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장애영향평가의 홍보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추후 지침이 실제 사용될 때에는 사례를 축적하여 제시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2차 델파이조사 결과

(1) 지침 전체 구성

지침 전체 구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도 이해 5.2점(1차)→5.2점(2차), 장애영향평가 실시 5.2점(1차)→5.3점(2차), 영향평가 운영 및 지원 5.1점(1차)→5.2점(2차), 장애영향평가 이해 5.0점(1차)→4.6점(2차), 기타 참고 자료 4.1점(1차)→4.3점(2차)순으로 나타나 1차 때와 중요도의 수준이 유사함을 나타냈다. 1차때 의견 취합을 통해 추가된 영역인 유사영향평가 제도 소개

와 장애영향평가 효과에 대해서는 각각 3.6점, 4.9점으로 나타나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유사영향평가 제도 소개 보다는 장애영향평가 효과에 대해서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2〉 지침 전체 구성에 대한 의견(2차)

점수	제도 이해		장애영향 평가 이해		장애영향 평가 실시		장애영향 평가 운영 및 지원		기타 참고 자료		유사영향 평가 제도 소개		장애영향 평가 효과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점	-	-	1	10.0	-	-	-	-	-	-	-	-	-	-
2점	-	-	-	-	-	-	-	-	-	-	2	20.0	-	-
3점	-	-	-	-	-	-	-	-	1	10.0	1	10.0	-	-
4점	2	20.0	1	10.0	-	-	-	-	6	60.0	6	60.0	3	30.0
5점	4	40.0	7	70.0	7	70.0	8	80.0	2	20.0	1	10.0	5	50.0
6점	4	40.0	1	10.0	3	30.0	2	20.0	1	10.0	-	-	2	20.0
전체	10	100.0	10	100.0	10	100.0	10	100.0	10	100.0	10	100.0	10	100.0
M (SD)	5.2(.79)		4.6(1.35)		5.3(.48)		5.2(.42)		4.3(.82)		3.6(.97)		4.9(.74)	

(2) 장애인지제도 소개

지침서의 첫 부분인 장애인지제도 소개 부분에 대한 델파이조사 결과 1차 때와 유사하게 중요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리통계(5.7점(1차)→5.7점(2차)), 장애영향평가(5.5점(1차)→5.5점(2차)), 장애인지제도(5.3점(1차)→5.3점(2차)), 장애인지예산(5.1점(1차)→5.2점(2차))순으로 나타났다. 1차때 의견 취합을 통해 추가된 영역인 장애인참여, 제도도입 후 변화는 각각 4.9점, 4.1점으로 나타나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 전문가는 장애인참여 영역을 추가하려면, 현재 운영 틀 전반을 변경시켜야 하며, 제도를 운영하면서 추후 개선해 보직할 사항으로 보여진다고 하였다. 또한 제도 도입 후 변화 영역은 장애영향평가가 개념, 필요성, 우수 사례 등 모두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장애인 참여 영역도 제외하였다.



〈표 III-13〉 장애인지제도 소개에 대한 의견(2차)

점수	장애인지 제도		장애인지 예산		장애영향 평가		장애분리 통계		장애인 참여		제도 도입 후 변화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점	-	-	-	-	-	-	-	-	-	-	-	-
2점	-	-	-	-	-	-	-	-	-	-	2	20.0
3점	-	-	-	-	-	-	-	-	1	10.0	1	10.0
4점	-	-	1	10.0	-	-	-	-	3	30.0	2	20.0
5점	7	70.0	6	60.0	5	50.0	3	30.0	2	20.0	4	40.0
6점	3	30.0	3	30.0	5	50.0	7	70.0	4	40.0	1	10.0
전체	10	100.0	10	100.0	10	100.0	10	100.0	10	100.0	10	100.0
M (SD)	5.3(.48)		5.2(.63)		5.5(.53)		5.7(.48)		4.9(1.10)		4.1(1.37)	

기타의견으로는 장애영향평가 추진배경에 장애영향평가를 도입함으로써 일반정책에서 장애인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식의 내용보다는 그간 일반정책에 대한 수혜에 있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수혜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시민임을 인지하더라도 적절한 자원을 배분할 수 있도록 정책 운영을 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3) 장애영향평가 구성요인

장애영향평가 구성요인의 중요도는 장애영향평가 개념 5.1점(1차)→5.3점(2차), 운영체계 4.9점(1차)→4.9점(2차)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중요도가 1차때와 마찬가지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차때 의견 취합을 통해 추가된 영역인 장애영향평가 절차, 장애영향평가 대상, 장애영향평가 적용, 장애감수성 여부, CRPD 기본 원칙 달성여부는 각각 4.4점, 4.7점, 4.5점, 4.6점, 4.4점으로 나타나 중요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4〉 장애영향평가 구성요인에 대한 의견(2차)

점수	장애영향 평가 개념		운영체계		장애영향 평가 절차		장애영향 평가 대상		장애영향 평가 적용		장애 감수성 여부		CRPD 기본원칙 달성여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점	-	-	-	-	-	-	-	-	-	-	-	-	-	-
2점	-	-	-	-	-	-	-	-	-	-	1	10.0	-	-
3점	-	-	1	10.0	1	10.0	-	-	-	-	2	20.0	2	22.2
4점	1	10.0	1	10.0	5	50.0	4	40.0	5	50.0	1	10.0	3	33.3
5점	5	50.0	6	60.0	3	30.0	5	50.0	5	50.0	2	20.0	2	22.2
6점	4	40.0	2	20.0	1	10.0	1	10.0	-	-	4	40.0	2	22.2
전체	10	100.0	10	100.0	10	100.0	10	100.0	10	100.0	10	100.0	9	100.0
M (SD)	5.3(.68)		4.9(.88)		4.4(.84)		4.7(.68)		4.5(.53)		4.6(1.51)		4.4(1.13)	

기타의견으로는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근거 조항으로 “장애인지예산” 제도를 명시하고 있는데, 법령과 계획은 예산과 관련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분야로 보여져 장애영향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계획에 대한 분석평가 지표에 장애분리통계 제시, 예산 수립에서 장애 특성 반영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 있으며, 그 밖에 중국에는 모든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사업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시범사업을 통해 구체적인 제도 운영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4) 장애영향평가 실행

장애영향평가 실행 영역의 중요도는 법령에 대한 평가실시 계획에 대한 평가 실시 5.4점(1차)→5.4점(2차), 5.4점(1차)→5.3점(2차), 장애영향평가 결과 보고 5.5점(1차)→5.1점(2차), 장애영향평가 관련 서식 4.6점(1차)→4.4점(2차) 순으로 나타나 1차때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차때 의견을 취합을 통해 추가된 영역인 정책제도 개선 이행 점검, 사업에 대한 평가 실시, 모니터링은 각각 4.9점, 5.1점, 5.2점으로 나타나 중요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행점검과 모니터링은 유사한 의미이기에 통합이 필요하며, 이행점검이 가능한 양식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표 III-15〉 장애영향평가 실행에 대한 의견(2차)

점수	법령에 대한 평가실시		계획에 대한 평가실시		장애영향 평가 관련 서식		장애영향 평가 결과 보고		정책제도 개선 이행 점검		사업에 대한 평가 실시		모니터링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점	-	-	-	-	-	-	-	-	-	-	-	-	-	-
2점	-	-	-	-	1	10.0	-	-	1	10.0	-	-	-	-
3점	-	-	-	-	-	-	-	-	-	-	-	-	1	10.0
4점	1	10.0	-	-	4	40.0	3	30.0	1	10.0	2	20.0	-	-
5점	5	50.0	6	60.0	4	40.0	3	30.0	5	50.0	5	50.0	5	50.0
6점	4	40.0	4	40.0	1	10.0	4	40.0	3	30.0	3	30.0	4	40.0
전체	10	100.0	10	100.0	10	100.0	10	100.0	10	100.0	10	100.0	10	100.0
M (SD)	5.3(.68)		5.4(.52)		4.4(1.08)		5.1(.88)		4.9(1.20)		5.1(.74)		5.2(.92)	

기타 의견으로는 개선의견 통보 서식, 개선 예정 또는 미완료 등을 표시할 수 있는 서식 등 장애영향평가 종합결과보고서에 대한 서식이 필요하며, 우수사례 제시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안된 지침서에서는 우수사례와 같은 내용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추후 실제로 사용될 때에는 사례들을 축적하여 제시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장애영향평가 지원체계

장애영향평가 지원체계에는 장애영향평가 주체와 장애영향평가 지원 및 교육이 있으며, 이에 대해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중요도가 높다(장애영향평가 주체 5.4점(1차)→4.8점(2차), 장애영향평가 지원 및 교육 5.1점(1차)→5.1점(2차))고 응답하였다. 1차 때 의견 취합을 통해 추가된 영역인 영향평가 계획 수립, 장애영향평가 매뉴얼 보급, 민관협력체계 구축은 각각 3.8점, 3.9점, 4.7점으로 나타나 중요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영향평가 주체가 1차 조사 때보다 점수가 0.6점 하락하였는데, 장애영향평가 지원체계에 ‘장애영향평가 주체’가 들어가는 것은 논리상 적절해 보이지 않은 이유에서 1차 조사 때 응답을 하지 않았고, 2차에는 낮은 점수를 주었기에 평균이 낮아지게 된 것이다. 그밖에 “영향평가 계획 수립”은 필요할 경우 “(3) 장애영향평가 구성 요인”에 포함시키고, “장애영

향평가 매뉴얼 보급” 은 필요성이 크지 않아 삭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표 III-16〉 장애영향평가 지원체계에 대한 의견(2차)

점수	장애영향평가 주체		장애영향평가 지원 및 교육		영향평가 계획 수립		장애영향평가 매뉴얼 보급		민관협력체계 구축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점	1	10.0	-	-	1	10.0	1	10.0	-	-
2점	-	-	-	-	2	20.0	2	20.0	-	-
3점	-	-	-	-	-	-	-	-	2	20.0
4점	-	-	-	-	2	20.0	2	20.0	2	20.0
5점	7	70.0	9	90.0	5	50.0	4	40.0	3	30.0
6점	2	20.0	1	10.0	-	-	1	10.0	3	30.0
전체	10	100.0	10	100.0	10	100.0	10	100.0	10	100.0
M (SD)	4.8(1.40)		5.1(.32)		3.8(1.55)		3.9(1.66)		4.7(1.16)	

기타 의견으로는 첫째, ‘장애영향평가 지원체계’ 에서 어떤 기관이 장애영향평가 전문기관인지 명시해 주어야 영향평가 관련교육 등을 요청하거나 관련자료 등을 수합할 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장애영향평가 교육에서 초빙 가능한 전문강사풀을 어디에 가서 구할 수 있는지 명시할 필요가 있고, 교육 결과를 다음연도 1월까지 누구에게 어떤 양식으로 제출할지 등의 구체적인 제시가 필요하다. 셋째, 지침이 일종의 장애영향평가 평가매뉴얼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하며, 영향평가계획 수립의 주체가 공무원이라면 운영체계에 포함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현재 장애영향평가 추진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평가전문기관 등을 언급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어서 제외하였으며, 추후 평가를 실시하게 될 때에는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6) 장애영향평가 참고자료

장애영향평가 참고자료 영역에는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법령 목록 5.1점(1차)→5.2점(2차), 법령에 따른 3년 이상 중장기계획 목록 5.0점(1차)→5.0점(2차), 유사 영향평가 제도 4.3점(1차)→4.3점(2차)순으로 나타났다. 1차 때 의견 취합을 통해 추가된 영역인 모니터링, 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협약 자료,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과의 연계성, 장애영향평가 주요 개선사례는 각각 4.4점, 4.4점, 4.2점, 4.3점으로 나타나 중요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모니터링은 (4) 장애영향평가 실행에 포함하거나 종합분석보고서로 대체가 가능하고 “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협약 자료”는 분량이 많을뿐더러 직접적 연관성이 없어 보이며, “장애인정책 종합계획과의 연계성”은 참고자료의 성격에 맞지 않다고 하였다. 또한 “장애영향평가 주요 개선사례”는 제도가 시행되고 난 다음에 가능한 자료여서 본 매뉴얼의 참고자료로 사용하는 건 불가능해 보인다는 의견이 있었다.

〈표 III-17〉 장애영향평가 참고자료에 대한 의견(2차)

점수	주요 법령 목록		유사 영향평가 제도		법령에 따른 3년 이상 중장기계획 목록		모니터링		장애인 권리협약 등 국제협약 자료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과의 연계성		장애영향 평가 주요 개선사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점	-	-	-	-	-	-	1	11.1	1	10.0	1	11.1	1	10.0
2점	-	-	-	-	-	-	1	11.1	-	-	-	-	-	-
3점	-	-	1	10.0	-	-	-	-	-	-	1	11.1	1	10.0
4점	2	20.0	5	50.0	2	20.0	1	11.1	4	40.0	2	22.2	3	30.0
5점	4	40.0	4	40.0	6	60.0	3	33.3	3	30.0	4	44.4	3	30.0
6점	4	40.0	-	-	2	20.0	3	33.3	2	20.0	1	11.1	2	20.0
전체	10	100.0	10	100.0	10	100.0	9	100.0	10	100.0	9	100.0	10	100.0
M (SD)	5.2(.79)		4.3(.68)		5.0(.67)		4.4(1.81)		4.4(1.43)		4.2(1.48)		4.3(1.49)	

3.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1) 지침 구성의 적절성

전반적 지침 구성의 적절성에 대해 공무원들은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장애영향평가 지침이 좀 더 세부적으로 구분되는 작업이 필요하고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였다. 또한 장애영향평가의 주체는 담당 공무원으로 효과적인 평가 및 적절한 평가를 위해서는 이 조직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전문가 1: 제도의 이해부분과 관련, 조사를 수행하는 장애인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조직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분석도 필요
- 전문가 4: 영향평가(안)이 다소 매끄럽지 못함
- 전문가 5: 현재 지침구성을 좀 더 세부적으로 구분, 분류하는 것도 필요함

2) 지침 내용의 적절성

영향평가 지침서가 노력한 흔적은 보이나, 담당 공무원이 보기에 이해하는데 어려우며, 좀 더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침서가 투입되기 전에 관계자에게 사전 이해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결국,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필수적이며, 지속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할 근거가 확인되었다 할 수 있다.

- 전문가 1: 장애인 정책 투입예산 지표 추가 필요
- 전문가 4: 좀 더 구체적이고 쉬운 내용이었으면 함
- 전문가 5: 장애인업무 담당자임에도 불구하고 지침서만으로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움이 있음. 향후 관련자에게 사전 이해 교육 및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임

3) 사용 용어의 적절성

지침에 사용된 용어의 적절성에 대한 공무원의 의견은 성별영향평가를 활용하여 장애영향평가 지침서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영향평가만을 봤을 때 다소 생



소하고 난해한 부분들이 있으며,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용어나 단어 활용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지침서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장애영향평가' 보다 '장애인영향평가' 가 더 적합해 보인다는 의견도 있었다. 조사대상 공무원이 현재 장애인복지사업 담당자이거나 이전에 장애인복지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것을 감안할 때, 향후 실제 적용될 지침에서는 보다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수정될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전문가 1: 장애영향평가, 인 지적 관점, 인지제도 등 사용 용어가 다소 어려움. 쉬운 용어 사용이 어렵다면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여짐
- 전문가 2: 지침서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장애영향평가' 보다 '장애인영향평가' 가 더 적절해 보임
- 전문가 4: 문맥 및 단어에 난해한 부분이 있으며 명확한 느낌이 부족함
- 전문가 5: 기존에 활용중인 다른 유형의 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를 활용하였지만, 장애영향평가지침서만 봤을 때는 다소 생소하고 난해한 부분이 있었음

4) 지침 활용도 제고를 위한 의견

장애영향평가 지침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의견으로는 먼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 선행되어야 하고 다음으로 지침서를 이해하기 쉽게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관계자들의 관심과 의지, 그리고 충분한 이해도 필요하다. 관계자들의 관심,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두 번째로 이 영향평가를 교육청에 중점을 두어 장애평등 등 교육적 차원에서 교사·학생이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세 번째로 유사영향평가 등에 대한 평가결과 분석을 통해 장애영향평가 지침서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계자료, 지자체 및 정부기관의 통계자료 등의 분석을 통해서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보았다.

- 전문가 1: 장애영향평가의 지침은 교육청에 비중을 많이 두어 장애평등 등 교육적 차원에서 교사·학생이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 전문가 2: 장애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 필요. 예산편성 시 활용 되길 바램. 또한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가장 시급
- 전문가 3: 타 영향평가에 대한 이해도도 낮은 상황. 장애영향평가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며, 그 전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부터 필요함

- 전문가 4: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수정하여 방법과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이 되어야 함
- 전문가 5: 유사영향평가 등에 대한 평가결과 분석을 통해 활용도를 높여야 함,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계자료, 지자체 및 정부 기관의 통계자료 등을 분석, 관계 부처의 관심과 의지 필요 및 관련 교육 필요,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띤 제도로 구축이 필요함

5) 기타 의견

장애영향평가 지침에 대한 공무원들이 제시한 기타의견으로는 장애영향평가 추진을 위한 교육, 담당자의 자세, 관련 제도의 간결성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먼저, 장애영향평가 관련된 교육이 필요하며, 형식적인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각 시도에서 별도의 1인 과정을 개설하여 장애체험, 인식개선, 장애영향평가 교육을 함께 실시하여 효율적인 평가가 실시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둘째, 단순 수치와 통계산출에 그치는 것이 아닌 현장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사업담당자들이 진행해야 한다고 하며, 장애영향평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자세에 대한 의견도 제시되었다.

셋째, 영향평가를 위한 지침서의 명확한 설명과 정책 및 제도의 간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평가 관리체계는 객관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아주 쉽게 구성되어야 하는데 장애영향평가 제도의 명확한 대상, 목적, 취지, 효과, 성과(가치), 평가방법 등에 대해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책 및 제도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 지원체계 단순화 또는 정책공유가 필요하다. 일례로, 장애인 현금 등 서비스가 너무도 다양하여 수혜의 총량 측정이 어려워 담당공무원 및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 국비지원, 도비지원, 시·군지원 등 지원기관이 많아 이러한 부분들이 장애영향평가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 현재 교육, 고용, 문화, 체육 등 관련부처에서도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장애인관련 단체 및 기관에 지원되는 예산이 많아 중복지원 또는 지원기피가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즉, 장애영향평가가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체계로 분산되어 있는 제도와 예산지원 체계 등이 간결화되어야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인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장애영향평가 실시전, 시범평가 단계에서부터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다루어져야 할 부분으로 판단된다.



- 전문가 1: 평가 관리체계가 객관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아주 쉽게 구성되어야 하고 장애인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 지원체계 단순화 또는 정책공유 필요함. 장애인 연금 등 서비스가 너무도 다양하여 수혜의 총량 측정이 어려워 담당공무원 및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장애 요소가 되고 있음. 국비지원(중앙부처 다수*), 도비지원, 시군지원 등 지원기관이 너무 많아 이러한 부분들이 장애영향평가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교육, 고용, 문화, 체육 등 관련부처에서도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장애인관련 단체 및 기관에 지원되는 예산이 많아 중복지원 또는 지원기피가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 장애영향평가 제도의 명확한 목적, 취지, 효과, 성과(가치) 등을 제시 선행 필요
- 전문가 3: 영향평가 관련 교육이 필요하며, 형식적인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각 시도에서 별도의 1인 과정을 개설하여 장애체험, 인식개선, 장애영향평가 교육을 함께 실시하여 효율적인 평가가 실시될 수 있어야 함
- 전문가 4: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하는 부분이 필요해 보이며, 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늠하기 어려움. 실제로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전문가 5: : 단순 수치와 통계산출에 그치는 것이 아닌 현장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사업담당자들이 진행하였으면 함

4. 소결

본 연구에서는 장애영향평가 지침안 마련을 위하여 델파이조사 및 공무원 의견 조사를 수행하였다. 먼저, 델파이조사에서는 지침 초안 마련을 위하여 장애계 및 유사영향평가 전문가 10인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서면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영향평가 지침서 영역(장애인복지제도 소개, 구성요인, 실행, 지원체계, 참고자료 등)별 세부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침서에 들어가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기본적으로 제시된 세부 영역 외에 추가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영역(〈표 Ⅲ-18〉)에 대해서도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침서에 수록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8〉 추가 영역

장애영향평가 대분류	추가 내용
장애인지제도 소개	장애인참여, 제도 도입후 변화
장애영향평가 구성요인	장애영향평가 절차, 장애영향평가 대상, 장애영향평가 적용, 장애감수성 여부, CRPD 기본원칙 달성여부
장애영향평가 실행	정책제도 개선 이행 점검, 사업에 대한 평가 실시, 모니터링
장애영향평가 지원체계	영향평가 계획 수립, 장애영향평가 매뉴얼 보급, 민간협력체계 구축
참고자료 등	모니터링, 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협약 자료, 장애인정책 종합계획과의 연계성, 장애영향평가 주요 개선사례

다음으로는 델파이 조사를 통해 완성된 지침 구성안을 가지고 향후 장애영향평가가 도입되어 실행될 경우, 직접 담당할 공무원을 대상으로 장애영향평가 지침안에 대한 구성 및 내용 적절성, 사용 용어의 적절성, 지침 활용도 제고를 위한 의견, 기타의견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장애영향평가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편이어서 관련 의견을 제시하는데 어려움을 토로하였으며, 좀 더 이해가 쉬운 용어나 단어를 활용하여 재수정될 필요가 있었고 또한 이에 대한 관계자들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이 지침서의 효과성을 위해 강제성을 필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필요하며, 장애인식개선이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델파이조사와 공무원 의견조사 결과를 종합해볼 때, 장애영향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나 운영체계 등에 대한 내용이 추가될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나, 현 시점에서 이러한 내용을 제시하는 것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현 시점에서는 관련 근거가 없고, 시범적으로도 실행되지 않은 한계로 인해 구체적인 사례나 영향평가 이후 변화되는 점들에 대해 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공무원 의견조사로 인해 장애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용어에 대한 어려움 등으로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IV 장애영향평가 이행을 위한 지침

1. 장애영향평가 지침 구성

장애영향평가 지침은 크게 5가지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유사 영향평가 지침의 사례와 델파이조사를 통한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제도의 소개(이해), 장애영향평가 이해, 장애영향평가 실행, 장애영향평가 지원체계, 참고자료로 구성하였다.

제도의 소개(이해) 영역은 장애영향평가의 추진배경과 더불어 장애인지예산, 장애분리통계 등 장애인지적 관점에서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장애영향평가 이해 영역은 장애영향평가에 대한 개념과 추진체계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장애영향평가 실행 영역은 법령과 계획, 사업에서 실제 장애영향평가를 수행할 때 사용되는 양식과 작성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장애영향평가 지원체계 영역은 장애영향평가 주체, 장애영향평가 지원 및 교육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참고자료에는 주요 법령 목록, 법령에 따른 3년 이상의 중장기계획 목록, 유사영향평가 제도 소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제도 이해

제도 이해 영역은 장애영향평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개념을 설명하고 평가 실행에 앞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제시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장애영향평가 추진배경, 장애영향평가와 관련된 개념들에 대하여 제시한다.

1) 장애영향평가 추진배경

-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통합되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의료, 교육, 고용, 사회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배제, 억압, 분리, 차별되는 경우가 많음
- 국가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추구하고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하는 의무를 지님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장애인연금, 장애인의료비지원, 특수교육, 직업재활지원사업 등과 같은 제도가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만으로는 장애인의 진정한 사회통합이 요원함
- 우리 사회의 모든 법률이나 정책, 사업과 계획에 있어 장애에 대한 감수성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평등하게 개발하여야 하며, 이것이 곧 우리 사회의 장애포괄적 관점, 장애인지적 관점이 반영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2006년 채택된 장애인권리협약(CRPD)은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서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고려할 것(제4조(1)(다))” 을 명시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UN에서 장애가 범분야 이슈(cross-cutting issues)임을 확인하고, 사회개발 의제에서의 장애주류화를 선언함
 -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개발계획(SDG)에서는 장애가 고려되어 교육, 직업훈련, 일자리, 교통, 접근성, 통계 등의 분야에서 장애와 장애인이 인지된 목표가 만들어짐
- 결국, 장애인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장애 특정적 정책)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일반정책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반정책에서 장애인에 대한 사각지대 없이 추진되어야 함



- 그러나 일반정책의 다양한 수혜집단 중 장애인은 충분한 수혜를 받지 못하거나 배제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 장애영향평가를 도입함으로써 일반정책에서 장애인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장애영향평가 관련 개념

(1) 장애인지적 관점 (장애인지제도)

- 장애인지(Disability Sensitivity)는 국가의 정책과 예산을 기획, 집행 및 평가함에 있어 '장애' 라는 변수를 고려하여 국가의 정책과 예산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에 최대한 평등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좀 더 장애에 대한 민감도 또는 감수성을 높이는 접근 또는 관점
-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고안 및 실행되는 제도를 장애인지제도라고 함

(2) 장애분리통계

- 일반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지원 또는 수혜격차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그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통계를 의미하며, 이는 장애영향평가 실행을 위한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국민건강증진사업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수혜자 수, 국토종합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선 배려에 장애인이 몇 명이나 포함되었는지 등에 대한 통계 등이 있음

(3) 장애인지예산

- 장애인지예산은 일반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형평성을 높이고, 예산집행에서의 효율성을 높이며,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평등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요인이 됨
- 즉, 일반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장애인을 고려하여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집행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평등권과 사회통합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며, 장애영향평가 실행의 중요한 도구가 됨

3. 장애영향평가 구성 요인

1) 장애영향평가의 개념

(1) 장애영향평가의 목적

- 정부 정책이 장애에 미치는 영향과 장애차별 발생 원인 등을 체계적·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인 장애평등을 실현
- 정책 수요자의 장애 특성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국민 만족도 제고

(2) 법적 근거(가안)⁵⁾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⁶⁾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장애인지예산”이란 장애인의 평등권 및 사회통합의 실현을 목적으로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편성·집행하는 예산을 말한다.

제8조(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수립)

-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③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장애인지예산의 수립 및 재원 조달의 구체적인 방안

제11조(장애인지예산의 배분·조정 등)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31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 제출하는 해당 기관의 예산요구서 중 장애인지예산 관련 예산요구서를 매년 6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제출한 예산요구서를 제12조에 따른 국가장애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매년 7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에 따른 국가장애인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5) 현재 장애영향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지난 2017년도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법률안 중 장애영향평가, 장애인지예산 등이 언급되어 있는 두 법안을 제시함

6) 양승조 의원 대표발의(발의 연월일: 2017.1.24.)



장애인기본법⁷⁾

제5조(일반원칙) 제4조의 장기적·종합적 장애인정책을 추진할 때 적용해야할 일반원칙은 다음과 같다.

9. 장애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예산 수립

(3) 적용 기관

- 중앙행정기관 : 부·처·청, 위원회 등
- 지방자치단체 : 시·도, 시·군·구, 시·도 교육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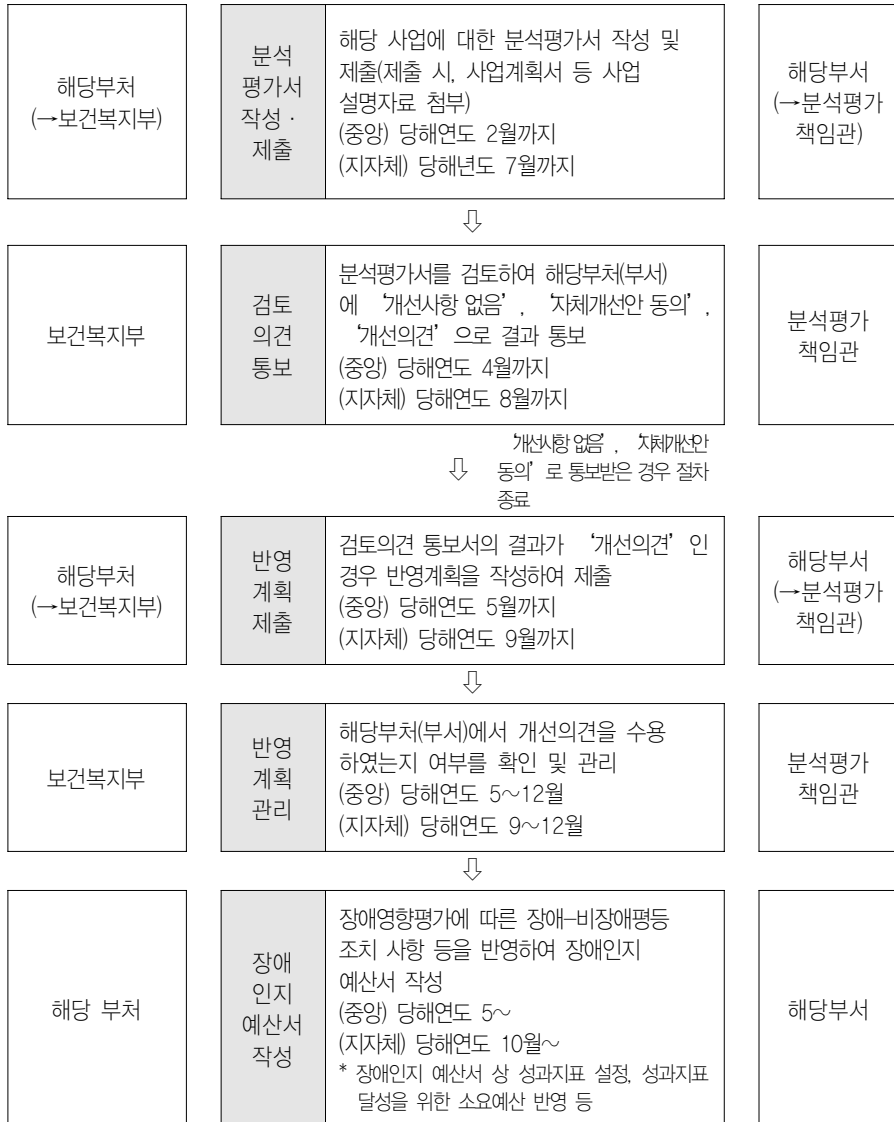
(4) 대상 정책

-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안
-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 중앙행정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

2) 장애영향평가의 운영체계

중앙행정기관	단계 및 내용		지방자치 단체
해당부처 (→보건복지부)	사업 선정	(중앙) 부처별 장애-비장애평등 실행 목표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대상사업 선정(전년도 12월) * 단, 사업 선정 시 각 부처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사업을 고려하여 대상사업 선정 (지자체) 장애-비장애평등 실행 목표와의 관련성, 지역 장애-비장애평등 지수 향상 등을 고려하여 선정(당해연도 6월)	해당부서 (→분석평가 책임관)
↓			

7) 이종명 의원 대표발의(발의 연월일: 2017.5.24.)





4. 장애영향평가 실행

1) 법령에 대한 평가 체크리스트

- 장애평등에 미칠 영향을 판단하기 위하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체크리스트를 통해 장애영향평가서 작성대상 여부가 결정됨. 법령의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음

〈표 IV-1〉 장애영향평가 체크리스트(법령)

법령명					
구분	제정() 개정()				
형식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소관 부서	부서장	부서명		성명	
				전화번호	
	담당자	부서명		성명	
				전화번호	
입법 일정 (예정)	관계기관 협의	~			

선정기준		해당 여부	주요 내용
제외 법령	<input type="checkbox"/>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 · 관리에 관한 법령 (예) 기구, 직제, 기록물, 물품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벌금,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법령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전시 관련 법령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대통령 긴급명령에 의해 제 · 개정되는 법령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국호·국기·연호, 전례, 국경(정부기념)일, 의전에 관한 법령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행정절차, 소송절차, 재판에 관한 법령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법령시행(일), 서식 및 효력에 관한 법령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조례나 규칙 제명 및 문구 등 단순 변경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장애평등 또는 장애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법령 예)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대상(법제처)**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일몰조항만 개정되는 법령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p>* 지방자치단체는 법제담당 등 기관특성에 맞게 수정 가능</p> <p>** 0000년 알기 쉽게 정비할 계획인 법령으로 순수하게 표현만 정비하려는 법령인 경우</p>			

2) 계획에 대한 평가 체크리스트

- 장애평등에 미칠 영향을 판단하기 위하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체크리스트를 통해 장애영향평가서 작성대상 여부가 결정됨. 계획의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음

〈표 IV-2〉 장애영향평가 체크리스트(계획)

계획명					
구분	신규 수립()		재수립()차 (년 ~ 년)		
근거 법령					
소관 부서	주관기관 및 부서	기관명		부서명	
		성명		전화번호	
	관계기관	기관명		부서명	
		성명		전화번호	



		기관명		부서명	
		성명		전화번호	
		기관명		부서명	
		성명		전화번호	
계획 수립 일정 (예정)	관계기관 협의	~ (일간)			
	계획안 마련	~ (일간)			
	위원회 상정 및 의결	~ (일간)			
붙임 자료	계획(안) 및 요약본				

선정기준		해당 여부	주요 내용
제외 계획	<input type="checkbox"/> 장애인의 사회통합 또는 장애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 예)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장애인 고용촉진기본 계획,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계획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은 장애영향평가 대상

3) 장애영향평가 관련 서식

(1) 법령

- 체크리스트를 통해 장애영향평가서 작성 대상이 확정되면, 장애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법령 작성 지표는 다음의 표와 같음

〈표 IV-3〉 분석평가 지표(법령)

분석평가 항목	점검 Point
1. 장애 구분 또는 고정관념	1-1. 제·개정 법령의 적용 대상에 장애 구분 조항이 있습니까? 예) 최저임금, 승진 및 승급 등을 적용함에 있어서 장애인 근로자와 비장애인 근로자를 달리 구분하여 적용하는 규정 1-2. 장애를 명시하는 경우 장애에 대한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있습니까?

분석평가 항목	점검 Point
	<p>예) 장애인을 표현할 때 ‘근로능력이 없는’ 이란 표현은 모든 장애인은 근로 할 수 없는 의존적인 존재라는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드러냄</p> <p>1-3. 제·개정 법령에 사용된 용어 중 장애에 대한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있습니까?</p> <p>예)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로서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로 표현함으로써 장애인의 생명권에 대해 우리 사회가 비장애인에 비해 소홀히 대하는 고정관념</p> <p>1-4. 법령상의 특정 조치에 장애에 대한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있습니까?</p> <p>예) 취업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중요한 과업이기 때문에, 장애인 의 무고용률을 정할 때 장애인 근로자비율과 장애인 실업자 수만을 고려하 는 것보다 비장애인 근로자비율과 비장애인 실업자 수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p>
II. 장애 특성	<p>2. 제·개정 법령안에 장애유무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경제·사회·문화 적 차이 등을 고려하여 반영 하였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 상 정책 수혜·수급 요건에 장애유무를 고려한 규정이 있는지 점검하였습니까? - 시설 설치, 시설 개선 사업 등에 장애유무를 고려한 규정이 있는지 점검하였습니까? - 통계나 실태조사 시 장애유무를 고려하였는지 점검하였습니까?
III. 장애인 참여	<p>3-1. 위원회(당연직 제외) 등 구성시 장애인의 참여를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결정과정에서 장애인의 참여가 배제되어 왔다면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일정 참여 비율을 규정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였습니까?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위촉위원은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이나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위촉 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조) <p>3-2. 위원회 구성 등을 위한 자격 요건이 장애인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등의 위원 자격 요건이 장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장애인이 결과적으로 배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IV. 장애 분리 통계	<p>4. 제·개정 법령과 관련한 별지 서식, 실태조사 등에 장애인 여부를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까?</p> <p>예)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장애인 여부를 고려하여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고 있는가?</p>



○ 이와 같은 분석틀을 사회보장기본법에 적용하여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음

〈표 IV-4〉 분석평가 지표 예시(법령)	
분석평가 항목	점검 Point
I. 장애 구분 또는 고정관념	<p>1-1. 제·개정 법령의 적용 대상에 장애 구분 조항이 있습니까? - 사회보장 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명시하고 있음</p> <p>1-2. 장애를 명시하는 경우 장애에 대한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있습니까? -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위원회 위원의 해촉)제1호에서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어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음</p> <p>1-3. 제·개정 법령에 사용된 용어 중 장애에 대한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있습니까? - 장애에 대한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나 용어는 확인되지 않음</p> <p>1-4. 법령상의 특정 조치에 장애에 대한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있습니까? - 법 제7조(국민의 책임)에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신적, 신체적으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에 서로 협력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장애에 대한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확인되지 않음</p>
II. 장애 특성	<p>2. 제·개정 법령안에 장애유무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경제·사회·문화적 차이 등을 고려하여 반영 하였습니까? - 「사회보장기본법」 상에서는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사회보장급여 수준, 사회보장급여 신청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지 않고, 장애유무에 관계 없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장애유무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경제·사회·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여 반영하고 있다고 명확하게 단정지을 수는 없음</p>
III. 장애인 참여	<p>3-1. 위원회(당연직 제외) 등 구성시 장애인의 참여를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까? - 「사회보장기본법」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에서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의 참여를 고려하고 있지 않음 -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1조(실무위원회의 설치 등)와 제12조(전</p>

분석평가 항목	점검 Point
	<p>문위원회 설치 등)에서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사회보장, 지역사회 복지, 경제, 고용 등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분야와 장애인 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고 제시하고 있어 장애구분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p> <p>3-2. 위원회 구성 등을 위한 자격 요건이 장애인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까? - 장애인의 참여를 고려하고 있지 않아 장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되는 자격으로 볼 수는 없음</p>
IV. 장애 분리 통계	<p>4. 제·개정 법령과 관련한 별지 서식, 실태조사 등에 장애인 여부를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까? - 법 제32조(사회보장통계)에서 사회보장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여부를 고려한 통계를 산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는 않음 - 그러나 사회보장통계 항목에 아동·노인·장애인 영역에서 장애분야 통계로 등록장애인 수, 장애인의 ADL 제한율, 장애인복지시설 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등 14개 항목을 포함하고 있음</p>

(2) 계획

- 체크리스트를 통해 장애영향평가서 작성 대상이 확정되면, 장애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계획 작성 지표는 다음의 표와 같음

〈표 IV-5〉 분석평가 지표(계획)

분석평가 항목	점검 Point
I. 비전과 목표	<p>① 장애인 여부로 다른 영향 발생 가능성</p> <p>· 가칭 '장애평등정책 기본계획' 의 목표에 부합하는지 및 장애인 여부로 다른 영향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지 점검</p>
II. 전략 및 중점과제	<p>② 장애인 여부에 따른 사회문화적 · 경제적 · 신체적 · 정신적 차이</p> <p>· 성장배경, 거주지역, 사회적 관계망, 폭력 등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장애에 대한 고정관념 등으로 인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다른 요구가 있는지 점검 · 고용형태, 직위, 수입, 근로조건 등으로 인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다른 요구가 있는지 점검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신체적 · 정신적 차이로</p>



분석평가 항목		점검 Point
		인해 장애인과 비장애인간 다른 요구가 있는지 점검
	③ 수혜에서의 장애 특성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수혜자 중 장애인 구성비율이 사업 대상자와 비교해 형평성이 있는지 점검 · 사업수혜발생에 있어서 장애특성을 반영하였는지 점검(장애-비장애인 형평성은 수혜자의 비율이 단순하게 5:95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④ 장애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 비전과 목표, 전략 및 중점과제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과제 신설·수정 등 개선방안 제시

○ 이와 같은 분석틀을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적용하여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1) 비전과 목표

(1) 장애인 여부로 다른 영향 발생 가능성

- 종합계획은 전 국민의 건강증진에 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주요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인력관리 및 재원조달방안 등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가장 본질적이면서 핵심적인 사안을 정리 및 기획하는 계획임
- 본 계획에서는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등 건강취약 집단이나 계층에 대한 건강증진 지원방안까지도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본 계획의 장애관련성은 직·간접적으로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음
- 4차 종합계획은 다음과 같이 총 6개 분야, 총 26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목할 만한 점은 26개의 과제 중 장애인건강이 별도의 과제로 선정되어 있음

2) 전략 및 중점 과제

(1) 장애인 여부에 따른 사회적·문화적·경제적·정신적 차이

- 동 계획에서는 5번째 중점과제를 인구집단 건강관리로 제시하며, 장애인건강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다. 장애인건강에 대한 과제는 장애인의 건강을 증진하고, 장애로 인한 이차적인 질환이나 장애를 예방하며, 장애인의 의료이용의 불평등을 해소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목적을 가짐
- 따라서 장애인 여부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차이를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볼 수 있음

(2) 수혜에서의 장애 특성 반영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기본적으로 장애 특성을 비교하지 않고 있음. 즉, 국민 건강증진종합계획은 기본적으로 장애 특성을 비교하지 않고 있음
- 다만, ‘인구집단 건강관리 > 장애인건강’ 사업의 세부지표에서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을 제고시킨다’고 제시하면서 2008년 60.1%에서 2020년 69.3%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
- 동 계획의 정책수혜에서 장애 특성 반영여부를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3) 장애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장애인지적 관점에 기반하여 수립되지 못했기 때문에 본 계획 속에서 장애평등이 지켜지지 않았으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
 - 장애인의 건강증진 요구에 대한 미충족 필요의 장애요인 규명
 -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증진 시스템 마련
 - 장애인의 건강행태 관리 및 2차 장애예방정책 강화
 - 장애인의 건강기능지표개발 및 적용
- 요컨대, 총 26개의 세부과제별 그 속에서의 장애차별 현황을 장애분리통계를 근거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장애평등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했지만, 1개 과제를 별도로 장애인건강으로 할당함으로써 제한적이거나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장애정책적 관점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고 볼 수 있음

(3) 사업

- 체크리스트를 통해 장애영향평가서 작성 대상이 확정되면, 장애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사업에 대한 작성 지표는 다음의 표와 같음

〈표 IV-6〉 분석평가 지표(사업)

분석평가 항목		점검 Point
I. 정책환경의 장애특성	① 장애인 여부에 따른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정신적 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배경, 거주지역, 사회적 관계망, 폭력 등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장애에 대한 고정관념 등으로 인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다른 요구도가 있는지 점검 · 고용형태, 직위, 수입, 근로조건 등으로 인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다른 요구도가 있는지 점검



분석평가 항목		점검 Point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차이로 인해 사업에 대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다른 요구도가 있는지 점검
	② 사업수혜에서의 장애 특성 반영 여부	· 사업 수혜자 중 장애인구성비율이 사업 대상자와 비교해 형평한지 점검 · 장애-비장애 요구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수혜 발생에 있어서 장애특성을 반영하였는지 점검(장애-비장애간 형평성은 수혜자의 비율이 단순히 5:95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③ 예산배분에서의 장애 특성 반영 여부	· 예산 배분에 있어서 장애 특성을 반영하였는지 점검(사업대상자의 장애인 구성비율을 고려한 예산배분, 장애-비장애로 특수한 요구를 고려한 예산 편성 등)
II. 장애 평등을 위한 조치 사항 (정책 개선 및 한류)	3. 법령	④ 법령(지침 포함) 반영 계획 · 정책환경의 장애 특성에 대한 분석 평가 항목 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법령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예) 장애 불평등한 훈령 내용 개정 등
	4. 예산	⑤ 예산 반영 계획 · 정책환경의 장애 특성에 대한 분석 평가 항목 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
	5. 사업	⑥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 정책환경의 장애 특성에 대한 분석 평가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업내용·수행방식(기타 제도 개선 포함) 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하여 사업에 반영 등 예) 장애분리 통계 구축 등

○ 이와 같은 분석틀을 건강검진 사업에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1) 정책 환경의 장애 특성	
(1) 장애인 여부에 따른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정신적 차이	
분석평가 항목	점검 포인트
사회문화적	◇ 장애인 여부에 따른 사회문화적 차이(성장배경, 거주 지역, 사회적

차이	관계망, 폭력 등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 등)로 서로 다른 정책 수요가 발생하거나, 장애인여부에 따른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 수립이 필요한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을 선택한 경우 내용 기술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의사의 장애에 대한 고정관념 또는 장애에 대한 물이해로 인해 건강검진이 원활하게 시행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의사에 대한 별도의 장애이해교육을 수행하거나 또는 장애 친화적 병원 건립이 필요
경제적 차이	◇ 장애인여부에 따른 경제적 차이(고용형태, 직위, 수입, 근로조건 등)에 따라 서로 다른 정책 수요가 발생하거나, 장애인여부에 따른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수립이 필요한가?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신체적 차이	◇ 장애인여부에 따른 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정책 수요가 발생하거나, 장애인여부에 따른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 수립이 필요한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을 선택한 경우 내용 기술 신체적 장애인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함에 있어서 장애유형별 신체적 특성을 반영한 건강검진 기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의료 기계 구입비용에 대한 지원정책을 실시하거나 또는 장애친화적 병원 건립이 필요
정신적 차이	◇ 장애인여부에 따른 정신적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정책 수요가 발생하거나, 장애인여부에 따른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 수립이 필요한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을 선택한 경우 내용 기술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함에 있어서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의사에 대한 별도의 장애이해교육을 수행하거나 또는 장애 친화적 병원 건립이 필요



(2) 사업수혜에 있어서의 장애 특성

① 건강검진 수검률 차이(16년)

구분	수검률	비고
전체 국민	78.5%	일반검진과 생애전환기 건강 진단의 평균
장애인	72.7%	만 40세 이상 건강 검진율은 75.7%
중증장애인(1~2급)	61.7%	-

② 장애-비장애 격차 및 원인분석

- 원인이 발생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장애인, 그 중에서도 중증장애인이 건강검진을 수월하게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의료기관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
- 즉,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의료진과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건강검진 기계 구입이 부족한 의료시설의 여건으로 인해 장애인의 경우,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전체 국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강검진 수검률이 매우 낮게 나타남

(3) 예산배분에서의 장애 특성 반영 여부

- 장애-비장애 건강검진 격차로 인해 장애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18년 4월 공모를 통해 최종적으로 선정된 8개 병원을 장애인친화건강검진 기관으로 지정
- 이들 의료기관에는 1~3급 중증장애인 검진비용 장애인 안전편의 관리비가 추가 지원되고, 장애 특화 장비비와 탈의실 등 시설 개보수비가 지급되며, 장애인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선정된 병원들에선 장애인이 필요한 지원을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체크리스트, 문진표, 장애유형별 수검자용 안내서 등을 갖추

2) 장애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라 장애인친화 건강검진기관을 2021년까지 100곳으로 확대할 계획
- 향후 장애 친화적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을 추진할 계획

4) 장애영향평가 결과보고

(1) 작성 내용

- 전년도 법령·계획에 대한 장애영향평가 및 정책반영 결과를 종합작성
 - 법령·계획별 장애영향평가 추진 현황
 - 법령·계획별 주요개선실적 및 향후개선계획
 - 장애영향평가를 통한 자체개선사례
 - 기관별 장애영향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개선 우수사례
- 개선실적 점검
 - 법령 : 장애영향평가 결과 개선의견 통보 과제 중 개선예정 또는 미완료된 과제를 대상으로 개선결과 작성
 - 계획 : 장애영향평가 결과 개선의견 통보 과제 중 개선예정 또는 미완료된 과제를 대상으로 개선결과 작성

(2) 참고사항

- 각 기관에서 제출한 ‘기관별 종합결과보고’를 토대로 「장애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 보고·국회 제출 및 공표
 - 장애영향평가 추진 실적(실시 건수, 정책개선 수용률, 우수사례 등)에 따라 우수부처 선정 및 발표 예정(국무회의)
- 장애영향평가 우수기관 및 우수사례 선정 시 반영
 - 우수사례는 ‘기관별 종합결과보고’의 기관별 정책개선 우수사례 중심으로 선정

5. 장애영향평가 지원체계

본 장은 장애영향평가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과 장애영향평가를 실행함에 있어 평가 담당 공무원과 관리자의 제도에 대한 이해와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에 대한 소개 내용을 다룬다.



1) 장애영향평가 전문기관

(1) 장애영향평가 전문기관 지정

- 장애영향평가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고자 보건복지부가 장애영향평가 전문기관⁸⁾을 지정

(2) 장애영향평가 전문기관 역할

- 지정된 전문기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된 장애영향평가 보고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 전문기관을 통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 전문기관은 장애영향평가 관련된 설명회를 실시하여 해당 기관 공무원의 이해도를 제고하여야 함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장애영향평가가 효율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해당 기관 및 보건복지부 적극 지원

2) 장애영향평가 교육

(1) 교육 개요

- 장애영향평가 담당 공무원과 관리자의 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제도의 내실화 및 공감대 제고를 통한 장애포괄적 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
- 장애영향평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장애영향평가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8) 현재 발의되어 있는 두 법률안(각주 6, 7참고) 중 '장애인기본법안'에서는 장애인정책영향평가를 언급하며, 업무기관으로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② 민간연구기관을 언급하고 있음

- 효율적인 장애영향평가를 위해 교육은 필수적이므로, 소속 공무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노력하여야 함

(2) 교육 실시방법

- 각 해당 기관에서는 교육의 내용, 시간, 교육 방법 등 장애영향평가를 위한 운영계획을 사전에 수립
- 교육 대상의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실시하되, 참여율을 높이고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기관장의 노력이 요구
- 각 기관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되 연 1회 이상(2시간 이상/회) 집합 대면교육으로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진행할 수도 있음
- 각 기관은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결과를 다음 년도 1월까지 제출

(3) 교육내용

- 장애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할 때, 장애주류화에 대한 개념, 장애인지적 관점에서의 사업 추진, 장애인지예산, 장애분리통계에 대한 이해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장애영향평가를 통한 정책개선 사례 공유
- 장애주류화 정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공무원과 관리자의 역할



6. 참고자료

본 장에서는 현행 법령들 중 장애영향평가 대상이 될 수 있는 법령 및 법 소관부처와 법에 근거한 중·장기 계획들을 나열하여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다만 관련 법령 목록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제외한 법만을 제시하였고, 관련 법령은 추후에 추가나 변경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목록

- 관련 법령 목록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 있는 현행법령들 중에서 장애와 관련된 사업이 포함되어 있거나 장애인이 정책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법령을 우선적으로 선정
- 선정된 법령의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하여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법무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통계청 등 다양한 중앙부처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109개의 법령을 장애영향평가의 우선 대상으로 제시

〈표 IV-7〉 장애영향평가 대상 법령 목록(안)

연번	법령	소관부처
1	건강가정기본법	여성가족부
2	건강검진기본법	보건복지부
3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4	고등교육법	교육부
5	고용보험법	고용노동부
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7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노동부
8	공공주택 특별법	국토교통부
9	공무원 인재개발법	인사혁신처

연번	법령	소관부처
10	교육공무원법	교육부
11	구강보건법	보건복지부
12	국가공무원법	인사혁신처
13	국가기술자격법	고용노동부
14	국민건강보험법	보건복지부
15	국민건강증진법	보건복지부
1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보건복지부
17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행정안전부
18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문화체육관광부
19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국무조정실, 외교부
20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문화체육관광부
21	국제문화교류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22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23	근로복지기본법	고용노동부
2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고용노동부
25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26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27	기초연금법	보건복지부
28	긴급복지지원법	보건복지부
29	노인복지법	보건복지부
3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보건복지부
31	노후준비 지원법	보건복지부
3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33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34	다문화가족지원법	여성가족부
35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36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문화체육관광부



연번	법령	소관부처
37	도로교통법	경찰청
38	모자보건법	보건복지부
39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4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41	민사소송법	법무부
4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43	방송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44	범죄인 인도법	법무부
45	범죄피해자 보호법	법무부
46	보건의료기본법	보건복지부
47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보건복지부
48	사립학교법	교육부
49	사회복지사업법	보건복지부
50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51	사회적기업 육성법	고용노동부
52	생활체육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5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54	소비자기본법	공정거래위원회
5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56	수상레저안전법	해양경찰청
57	아동복지법	보건복지부
58	양성평등기본법	여성가족부
59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60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여성가족부
61	영유아보육법	보건복지부
62	영재교육진흥법	교육부
63	예술인복지법	문화체육관광부

연번	법령	소관부처
64	유아교육법	교육부
6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66	의료급여법	보건복지부
67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68	인신보호법	법무부
69	입양특례법	보건복지부
70	자격기본법	고용노동부, 교육부
7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국토교통부
72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7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74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보건복지부
7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76	주거급여법	국토교통부
77	주거기본법	국토교통부
78	주민투표법	행정안전부
79	주택법	국토교통부
80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무부
81	중소기업기본법	중소벤처기업부
82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중소벤처기업부
8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중소벤처기업부
84	지방공무원법	행정안전부
85	지식재산 기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6	지역문화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87	지역보건법	보건복지부
88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고용노동부, 교육부
89	직업안정법	고용노동부



연번	법령	소관부처
90	진로교육법	교육부
91	철도안전법	국토교통부
9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고용노동부
93	청소년 기본법	여성가족부
94	청소년 보호법	여성가족부
95	청소년복지 지원법	여성가족부
96	청소년활동 진흥법	여성가족부
97	초·중등교육법	교육부
98	최저임금법	고용노동부
99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100	치매관리법	보건복지부
101	통계법	통계청
102	특허법	특허청
103	평생교육법	교육부
104	학교보건법	교육부
10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교육부
106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107	협동조합 기본법	기획재정부
108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10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청

2) 법령에 따른 3년 이상 중장기계획 목록

- 법령에 근거한 중·장기 계획들은 개인의 안전이나 건강, 주거 및 생활과 관련된 영역으로 장애영향평가 대상이 될 수 있음
- 추후 중·장기 계획의 목록은 추가적으로 발굴하여 제시

〈표 IV-8〉 법령에 따른 3년 이상 중장기 계획 목록(안)

계획명	법령	목적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건강증진법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국가와 지자체간 정책 연계성 강화, 지방계획의 실효성 제고, 국민 인식 제고 등
사회보장기본계획	사회보장기본법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의 균형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장기주택종합계획	주택법	국민 주거복지 증진, 주택수준 및 주거환경 향상, 주택시장 안정을 달성
환경보전종합계획	환경보전법	환경정책의 궁극목표인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환경정책으로의 전환을 위한 중장기 청사진 제시
철도안전 종합계획	철도안전법	대형철도사고 ZERO화, 철도사고 30% 감소(2020년까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자연재해대책법	지방자치단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업무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검토 전문가 임명·위촉, 검토회의 개최·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
국토종합계획	국토기본법	국내의 여건 변화와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 및 정책기조 대두에 능동적 대응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공간 데이터 기반 서비스로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 모든 시민을 배려하는 포용적 스마트시티 조성, 혁신 생태계 구축을 통한 글로벌 협력 강화

3) 유사영향평가

(1) 성별영향분석평가

○ 목적

- 정부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



- 정책의 성차별적 원인을 분석평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책추진 체계 확립
- 정책 수요자의 성별 특성에 기반한 정책실행으로 국민 만족도 제고

○ 법적근거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하 “법” 이라 함)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함)
- 법제업무 운영규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

○ 대상정책

-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안
-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 중앙행정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 적용기관

- 중앙행정기관 : 부·처·청, 위원회 등
- 지방자치단체 : 시·도, 시·군·구, 시·도 교육청

○ 실시방법

- 성별영향분석평가시스템(<http://gia.mogef.go.kr>)을 통해 분석평가의 모든 절차 진행

(2) 고용영향평가

○ 목적

-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정책, 사업이나 법, 제도 등의 수립·추진으로 인해 예상되는 고용효과를 분석
- 해당 정책 조치들이 본래 의도한 고용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일자리의 양과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정책 개선 권고를 제시

- 법적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 고용영향평가지침
- 대상정책
 - 고용률 70%로드맵 추진과제 등 일자리 창출 핵심사업
 -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주요 재정지출사업 : 인프라, R&D, 산업육성, 노동, 복지, 관광 분야 등
 -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법, 제도, 규제개선 정책
 - 민간단체(경제단체, 노조, NGO 등) 및 일반국민이 제안하는 과제
- 적용기관
 - 중앙행정기관 : 부·처·청, 위원회 등
 - 지방자치단체 : 시·도, 시·군·구, 시·도 교육청
- 실시방법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용영향평가 요청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
 - 고용영향평가센터에서 평가실시



V

결론 및 제언

1. 연구결과와 논의

본 연구는 장애인지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장애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기초 연구의 후속 연구로, 장애인지제도 실행의 강력한 수단이자 도구인 장애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준비를 함에 있어 국내외 사례들을 수집·분석하여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추후 장애영향평가를 직접 담당하게 될 공무원과 관계자들의 이해 및 인식 제고를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장애영향평가 지침의 기본 내용을 제시하는데 주요한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 국내 유사 영향제도인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고용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의 현황과 각 평가의 지침 또는 매뉴얼 내용을 분석·정리하였으며, 해외사례로 아일랜드의 장애영향평가 지침을 발췌·요약하였다. 또한 장애영향평가 지침 내용 구성을 위해 장애계 및 유사영향평가 제도 전문가를 대상으로 2회에 걸쳐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여 구성과 내용의 적절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그리고 추후 장애영향평가를 직접 담당하게 될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침의 구성과 이해도, 적용가능성 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선행연구와 유사영향평가 사례, 델파이조사, 의견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장애영향평가 지침안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장애영향평가 지침은 크게 5개 영역으로 제도 소개(서론), 장애영향평가 구성요인, 장애영향평가 실행, 장애영향평가 지원체계, 장애영향평가 참고자료로 구분될 수 있었다.

제도 소개(서론) 영역에서는 장애인지제도, 장애인지예산, 장애영향평가, 장애분리통계로 세분화하여 내용을 정리하였다. 장애영향평가 구성요인 영역에서는 운영체계, 절차, 대상으로 세분화하여 내용을 정리하였다. 장애영향평가 실행 영역에서는 법령에 대한 평가실시, 계획에 대한 평가실시, 사업에 대한 평가실시, 정책제도 개선 이행 점검으로 세분화 하여 내용을 정리하였다. 지원체계 영역에서는 장애영향평가 지원 및 교육에 대하여 내용을 정리하였다. 마지막 참고자료 영역에서는 주요법령 목록, 법령에 근거한 3년 이상의 중장기 계획 목록, 유사 영향평가 제도에 대하여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선행연구와 장애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장애영향평가 지침 구성초안을 제시하였음에도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선 아직 장애영향평가가 법적 근거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유사영향평가 지침에서처럼 우수사례를 함께 제시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현행 법령과 추진되고 있는 종합계획, 사업을 대상으로 장애영향평가 분석 틀을 적용하는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두 번째 지침에 제시되어 있는 장애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주요 법령 목록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정책으로 장애인이 당연히 정책 대상에 포함되는 법을 연구진에서 제시한 것으로 추후 실제 적용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장애영향평가 지침 연구를 수행한 것은 지속적으로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축적함으로써 장애영향평가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실행되게 되었을 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며,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학습함으로써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정책 제언

장애영향평가 지침 마련 연구를 통해 향후 장애영향평가 담당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장애영향평가 도입 시 활용될 수 있는 지침 초안 내용을 제시하면서 장애영향평가가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한 정책 과제를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장애영향평가 실행을 위한 근거 마련, 즉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장애영향평가는 정책이나 법령,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에 장애가 되는 것을 확인하는데 사용하는 과정이며, 장애인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 종합적인 검토라고 할 수 있다. 장애영향평가를 통해 법령이나 계획, 사업들이 장애인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충분히 인식하고 이해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이므로, 장애영향평가가 실행되어야 함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을 것이다. 결국은 장애인이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고 차별없는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져야 하기에 이를 실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마련이 시급하다. 장애영향평가는 법령 제정 단계, 즉 초기단계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법에 따른 계획이 수립 가능하고, 계획에 따른 예산 반영이 뒷받침 될 수 있기에 장애영향평가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목소리를 내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무부처를 보건복지부로 하고, 복지부 내 전담과를 신설하여 전략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둘째, 장애영향평가를 담당하게 될 공무원 및 관련자에 대한 지속적 교육이 필요하다.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가 시행될 때,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제도가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시범사업을 추진하거나, 법의 개정으로 인해 바뀌어야 하는 업무체계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적인 지침이나 구체적인 교육이 없으면 잘 실행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장애영향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실행된다 할지라도 담당자의 이해가 없다면, 제대로 실행될 수 없기에 지속적으로 관련된 개념과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에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에 장애영향평가 내지는 장애주류화 정책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국가기관이 관련 내용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애영향평가를 수행할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장애영향평가나 장애인지예산제도, 장애분리통계 구축은 장애주류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라고 할 수 있으며, 법적 근거 없이도 지속적으로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지속적으로 자료들을 축적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유사 영향평가제도의 사례에서도 확인하였듯이, 장애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제도의 도입과 실행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고, 또 연구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유관기관 및 장애계, 공무원의 역량을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전문기관 지정의 필요성을 제안하며, 한국장애인개발원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러한 지원체계나 조직이 없이는 장애영향평가가 효율적·효과적으로 수행되기는 어려울 것이 자명하므로 조기에 이러한 지원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제안한다.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2019). 2019년 재정예산사업 고용영향평가 가이드라인.
- 공정거래위원회(2019). 2018년도 경쟁영향평가 매뉴얼(3집).
- 김동호(2019). 장애주류화가 여는 장애인정책의 새 지평.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 증진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pp53-54.
- 여성가족부(2019). 2019년 성별영향평가지침.
- 이혜경 · 김동기 · 이수연(2018). 장애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 이혜경 · 김동기 · 조연숙 · 이선화 · 이수연(2017). 장애인지제도 도입 및 운영방안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 Department of Justice and Equality(2012). Guidelines for Government Departments: How to conduct a Disability Impact Assessment.
- Ireland Department of Justice and Equality(2012). How to Conduct a Disability Impact Assessment - Guide for Government Departments.
-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 <http://www.ftc.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사이트: <http://www.law.go.kr/>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18). “경쟁영향평가 매뉴얼(제3집) 제작 · 배포” (11월 6일)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02377>(검색일 2019년 7월 23일)
- 아일랜드 정의평등부 사이트: <https://www.justice.ie/en>
- 한국노동연구원 사이트: <http://www.kli.re.kr>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사이트: <http://www.kwdi.re.kr>



[부록 1] 고용영향평가 지침서 구성

1. 재정사업 고용평가 개요
 - Ⅰ. 평가대상 사업 및 적용 제외사업
 - Ⅱ. 평가 내용, 방법 및 절차
 - Ⅲ. 평가 결과의 활용
 - Ⅳ. 세부 추진 일정
2.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산출식
 - Ⅰ. 사업유형별 고용효과 산출방식
[공통] 재정지출 고용효과
 - 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 나. SOC사업
 - 다. R&D사업
 - 라. 문화·예술사업
 - 마. 보건·복지사업
3. 산출 예시
 - Ⅰ. 고용영향평가 양식
 - Ⅱ. 고용효과 산출 예시
 - Ⅲ. 고용영향평가 담당자 연락처

[부록 2] 경쟁영향평가 지침서 구성

제1장 서론

1. 경쟁영향평가의 유형
2. 경쟁영향평가의 절차

제2장 경쟁영향평가의 핵심 개념

1. 시장지배력
2. 진입장벽
3. 신생기업의 진입
4. 기업의 퇴출
5. 혁신과 효율성
6. 경쟁자의 비용 상승 초래

제3장 경쟁영향평가 점검목록을 활용한 예비평가

1. 공급자의 수 또는 범위에 대한 제한
2. 공급자의 경쟁능력 제한
3. 공급자의 경쟁유인 감소
4.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5. 결론

제4장 잠재적 규제에 대한 심층평가

1. 심층평가가 필요함을 나타내는 지표
2. 심층평가가 필요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지표
3. 경쟁영향평가의 정도
4. 경쟁영향평가 수행 시 고려사항

제5장 대안의 제시

1. 정책목적의 확인
2.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의 특정요소를 확인하기
3. 기술적 전문지식
4. 좀 더 광범위한 규제환경에 대한 이해
5. 변화된 사업 또는 시장환경에 대한 이해
6. 대안을 개발하는 기술

제6장 대안의 비교

1. 배경이 되는 개념
2. 정성적 분석
3. 정량적 분석
4. 편익과 비용의 측정

제7장 권고안

1. 최적 대안의 선택



2. 권고안의 제시
3. 새로운 규제의 초안 작성
4. 최종 승인
5. 규제의 시행

제8장 사후평가

제9장 경쟁영향평가제도의 운영과 기관 간 역할분담

1. 경쟁영향평가의 대상 및 분석 수준
2. 예비평가
3. 심층평가
4. 경쟁영향평가의 절차 및 기관 간 역할분담

[부록 3] 성별영향평가 지침서 구성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1.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개요
2.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운영체계
3. 정책개선 실적관리 및 종합분석보고
4. 2018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주요 추진일정
5. 2018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 주요 개정사항

법령·계획·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1.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 가. 개요
 - 나. 평가 대상
 - 다. 평가 절차
 - 라. 단계별 세부작성 요령
2.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 가. 개요
 - 나. 추진 체계
 - 다. 추진 절차(지방자치단체)
 - 라. 단계별 세부작성 요령(지방자치단체)
3.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 가. 개요
 - 나. 대상 사업 선정
 - 다. 추진 절차
 - 라. 분석평가서 작성 요령
4. 정부홍보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 가. 개요
 - 나. 분석평가 대상의 선정
 - 다. 분석평가 점검내용
 - 라. 추진체계
 - 마. 작성요령
 - 바. 추진절차
 - 사. 분석평가서 작성 서식
5.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통보서 및 반영계획 서식
 - 가. 법령·계획·사업 분석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 통보서 서식
 - 나. 법령·계획·사업 개선의견 통보서에 대한 반영계획서 서식
 - 다. 정부홍보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서식
6. 기관별 종합결과보고
 - 가. 작성 기관
 - 나. 제출 기한
 - 다. 작성 내용
 - 라. 참고사항
 - 마. 작성 양식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1.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개요
2. 정책개선 권고 및 이행점검
3.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절차

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 및 지원체계

1.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 가. 분석평가책임관 지정
 - 나. 분석평가책임관의 역할
 - 다. 실무담당자 지정
 - 라. 실무담당자의 역할
2. 분석평가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3.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 가. 평가기관의 기능
 - 나. 평가기관의 지정
4. 성별영향분석평가(GIA)시스템
 - 가. 개요
 - 나. 특징
 - 다. 주요기능
 - 라. GIA 시스템 사용도
 - 마. 컨설팅 및 분석평가서 전문가 검토
 - 바. 시스템 이용 문의
 - 사. GIA시스템 이용자 매뉴얼
5.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 가. 개요
 - 나. 세부 실시방법
6. 민관협력체계 구축

참고자료

1. 관계법령
 - 가. 성별영향분석평가
 - 나. 양성평등기본법
 - 다. 국가재정법
 - 라. 지방재정법
 - 마. 지방회계법
 - 바. 통계법
 -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표준조례
2.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주요 개선사례
 - 가. 성차별 해소 및 성별 균형참여 확대
 - 나. 성역할 고정관념의 해소 및 남성의 양육·돌봄의 권리 보장
 - 다. 여성의 고용여건 및 경제활동 활성화
 - 라. 성별·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재난·아동·시설이용 안전 확보

- 마. 성별 특성을 반영한 연구 및 성인지통계 기반 마련
- 바. 성평등 교육 등을 통한 성평등의식 제고
- 3. 법률에 따른 3년 이상 중장기계획 목록
 - 가. 중앙행정기관
 - 나. 광역자치단체
 - 다. 기초자치단체
 - 라. 시·도교육청
- 4. 부처별 성평등 실행 목표
- 5. 지역 성평등 지수 지표 현황
- 6. 공공시설·공간조성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 가. 추진 배경
 - 나. 필요성
 - 다. 안전유형에 따른 사업별 성별영향분석평가 점검포인트
- 7. 주요 성인지 통계DB 사이트
 - 가. 국내 사이트
 - 나. 해외 사이트



[부록 4] Ireland 정의평등부의 장애영향평가 기록지(양식)

The 5-Step disability impact assessment process is essentially a set of five questions which should be posed for any actions/objectives your Department is proposing to undertake and which will be the subject of a substantive memorandum submitted to Government.

The answers to these questions should then be incorporated into the impact section of the draft memorandum for Government.

Department /Office:	Contact for enquiries:

Objective/Action to be assessed:

Legislation/scheme:
Stage:
Date:
Available to view or download at:

Step 1: Will the proposed decision have an impact on people with disabilities?

--

Step 2: Outline the evidence on which your assessment of potential impact on people with disabilities is based (for example, consultation with relevant stakeholders, policy material, research, etc.)

Step 3: If you consider that the decision may have an impact on people with disabilities, outline what that impact will be.

Step 4: If the potential impact on people with disabilities is negative, outline how you intend to alleviate that negative impact.

Step 5: Outline any action being taken to monitor impact on people with disabilities over time.



[부록 5] 장애영향평가 지침 구성을 위한 전문가 델파이조사지(1차)

**장애영향평가 지침 구성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1차 델파이조사〉**

구성 요인	대분류	중분류	요인 선정 중요도					
			① (낮음)	②	③	④	⑤	⑥ (높음)
지 침 내 용	1. 지침 전체 구성	제도 이해						
		장애영향평가 이해						
		장애영향평가 실시						
		장애영향평가 운영 및 지원						
		기타 참고자료						
		추가의견 제시						
		추가의견 제시						
	<p>• 요인설명: 장애영향평가 지침을 마련함에 있어 지침에 전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즉 지침 구성(안)에 대하여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 청취</p>							
	<p>□ 부적합 사유: 부적합하다고 생각되면, 의견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p> <p>-</p>							
	<p>□ 기타의견: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p> <p>-</p>							

구성 요인	대분류	중분류	요인 선정 중요도					
			① (낮음)	②	③	④	⑤	⑥ (높음)
제 도 이 해	장애 인지 제도 소개	장애인지제도						
		장애인지예산						
		장애영향평가						
		장애분리통계						
		추가 의견 제시						
		추가 의견 제시						
	<p>• 요인설명: 지침 작성에 앞서 제도와 관련 용어의 정의를 제시하여, 이해도를 높이하고자 함. 이에 장애인지제도의 구성요인 및 도구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지제도, 장애인지예산, 장애영향평가, 장애분리통계 등의 개념을 정리하여 제시함</p>							
	<p>□ 부적합 사유: 부적합하다고 생각되면, 의견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p> <p>-</p>							
	<p>□ 기타 의견: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p> <p>-</p>							



구성 요인	대분류	중분류	요인 선정 중요도					
			① (낮음)	②	③	④	⑤	⑥ (높음)
장애영향평가 이해	장애영향평가 구성요인	장애영향평가의 개념						
		장애영향평가의 운영체계						
		추가 의견 제시						
		추가 의견 제시						
	<p>• 요인설명: 장애영향평가와 관련한 소개와 구성요인별 정의와 설명을 제시함으로써, 지침 활용자(공무원 등)의 이해를 높이하고자 함. 이에 장애영향평가 개념, 운영체계에 대해 소개함</p>							
	<p>□ 부적합 사유: 부적합하다고 생각되면, 의견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p> <p>-</p> <p>□ 기타 의견: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p> <p>-</p>							

구성 요인	대분류	중분류	요인 선정 중요도					
			① (낮음)	②	③	④	⑤	⑥ (높음)
장애 영향 평가 실행	장애 영향 평가 실행	법령에 대한 평가실시						
		계획에 대한 평가실시						
		장애영향평가 관련 서식						
		장애영향평가 결과보고						
		추가 의견 제시						
		추가 의견 제시						
	장애 영향 평가 실시	<p>• 요인설명: 장애영향평가 실제 방법에 대하여 법령, 계획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지침을 활용하여, 평가에 대한 실제 사례 제공하여 이해도를 높이고자 함</p>						
		<p>□ 부적합 사유: 부적합하다고 생각되면, 의견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p> <p>-</p>						
		<p>□ 기타 의견: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p> <p>-</p>						



구성 요인	대분류	중분류	요인 선정 중요도					
			① (낮음)	②	③	④	⑤	⑥ (높음)
장애영향평가 지원 체계	장애영향평가 지원 체계	장애영향평가 주체						
		장애영향평가 지원 및 교육						
		추가 의견 제시						
		추가 의견 제시						
	• 요인 설명: 장애영향평가 주체 및 주체별 역할, 장애영향평가 지원 및 담당자 교육 등에 대하여 설명함							
	□ 부적합 사유: 부적합하다고 생각되면, 의견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기타 의견: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구 성 요 인	대분류	중분류	요인 선정 중요도					
			① (낮음)	②	③	④	⑤	⑥ (높음)
기 타 참 고 자 료	장애 영향 평가 참고 자료	유사 영향평가 제도						
		주요 법령 목록						
		법령에 따른 3년 이상 중장기계획 목록						
		추가 의견 제시						
		추가 의견 제시						
		추가 의견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요인설명: 장애영향평가에 대한 부가적인 자료와, 유사 영향평가제도에 대해 소개함으로써, 장애영향평가에 대한 이해도와 참여도를 높이하고자 제안함. 또한 장애영향평가 대상이 될 수 있는 주요 법령과 계획 목록을 제시하고자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적합 사유: 부적합하다고 생각되면, 의견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기타 의견: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부록 6] 장애영향평가 지침 구성을 위한 전문가 델파이조사지(2차)

**장애영향평가 지침 구성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2차 델파이조사〉**

구 성 요 인	대분류	중분류	1차 델파이 결과		요인 선정 중요도					
			귀하 응답	전체 평균	① (낮음)	②	③	④	⑤	⑥ (높음)
1. 지침 전체 구성		제도 이해								
		장애영향평가 이해								
		장애영향평가 실시								
		장애영향평가 운영 및 지원								
		기타 참고자료								
		유사 영향평가 제도								
		장애영향평가의 효과								
		추가 의견 제시								
	지 침 내 용	1차 의견								
		※ 추가 의견 -								

구성 요인	대분류	중분류	1차 델파이 결과		요인 선정 중요도					
			귀하 응답	전체 평균	① (낮음)	②	③	④	⑤	⑥ (높음)
제 도 이 해	2. 장애인지 제도 소개	장애인지제도								
		장애인지예산								
		장애영향평가								
		장애분리통계								
		장애인 참여								
		제도 도입 후 변화								
		추가 의견 제시								
	1차 의견									
	※ 추가 의견									



구성요인	대분류	중분류	1차 델파이 결과		요인 선정 중요도					
			귀하 응답	전체 평균	① (낮음)	②	③	④	⑤	⑥ (높음)
장애영향평가 이해	3. 장애영향평가 구성요인	장애영향평가의 개념								
		장애영향평가의 운영체계								
		장애영향평가의 절차								
		장애영향평가의 대상								
		장애영향평가의 적용(개선)								
		장애감수성 여부								
		CRPD 기본원칙 달성 여부								
		추가 의견 제시								
	장애영향평가 1차 의견									
	<div>※ 추가 의견</div> <div>-</div>									

구 성 요 인	대분류	중분류	1차 델파이 결과		요인 선정 중요도					
			귀하 응답	전체 평균	① (낮음)	②	③	④	⑤	⑥ (높음)
장 애 영 향 평 가	4. 장애영향 평가 실행	법령에 대한 평가실시								
		계획에 대한 평가실시								
		장애영향평가 관련 서식								
		장애영향평가 결과보고								
		정책/제도개선 이행점검								
		사업에 대한 평가실시								
		모니터링								
		추가 의견 제시								
		실시	1차 의견							
	※ 추가 의견 -									



구성 요인	대분류	중분류	1차 델파이 결과		요인 선정 중요도					
			귀하 응답	전체 평균	① (낮음)	②	③	④	⑤	⑥ (높음)
장애영향평가 운영및지원	5. 장애영향 평가 지원체계	장애영향평가 주체								
		장애영향평가 지원 및 교육								
		영향평가 계획수립								
		장애영향평가 평가매뉴얼 보급								
		민관협력체계 구축								
		추가의견 제시								
	1차 의견									
	※ 추가 의견									

장애영향평가 지침 마련 연구

발 행 일 : 2019년 10월

발 행 인 : 최경숙

발 행 처 : (재)한국장애인개발원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5층

Tel. 02-3433-0600

Fax. 02-416-9567

<http://www.koddi.or.kr>

편집·인쇄 : 한국장애인상생복지회

ISBN 978-89-6921-327-3 93330

※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무단 복사하는 것을 금합니다.